

북한 핵실험

제국주의 압박의 산물

▶ 5, 16 면

철도, 전기, 가스 ...

민영화와 국유화

▶ 6 ~ 7 면

논쟁

진보의 진로는 무엇인가

▶ 3 ~ 4 면

10주년

이라크 침공과 2·15 반전 시위

▶ 9 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닌주의는 끝났는가

▶ 10 ~ 11 면

발행인_ 김민식 편집인_ 김인식
인쇄인_ (주)아이피디 이승철
등록번호_ 서울다08179 (격주간)
등록연월일_ 2009년 1월 12일
주소_ 서울시 중구 회현동2가 57-1 2층
전화_ 02-777-2792 팩스_ 02-6499-2791
제보_ 02-777-2791 E-Mail_ left21@left21.com

ISSN 2005-8217



Left21.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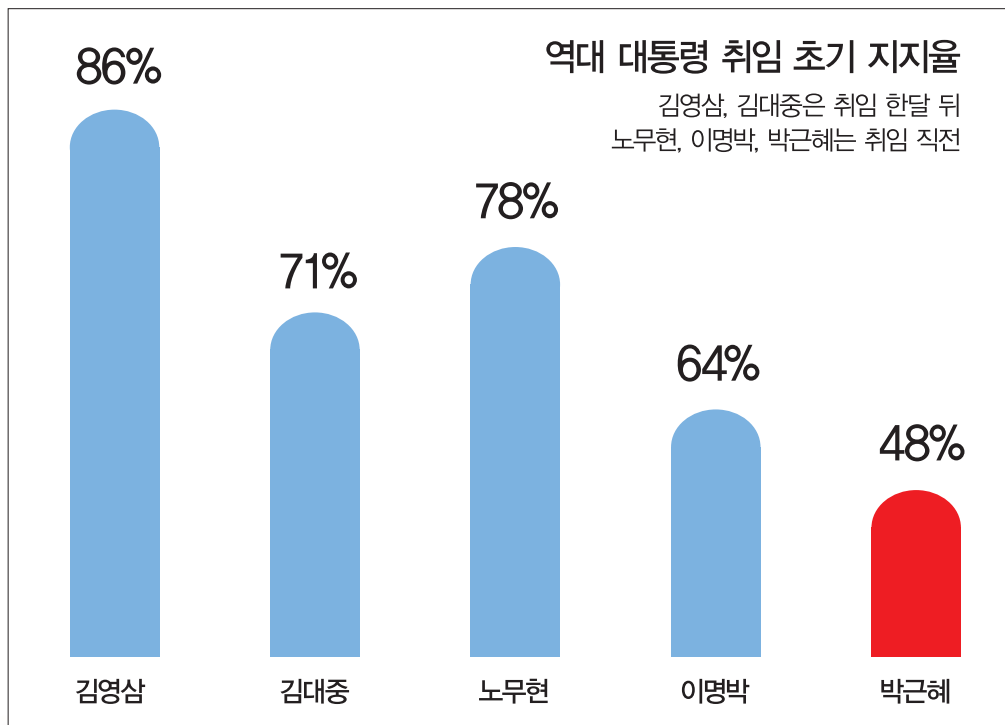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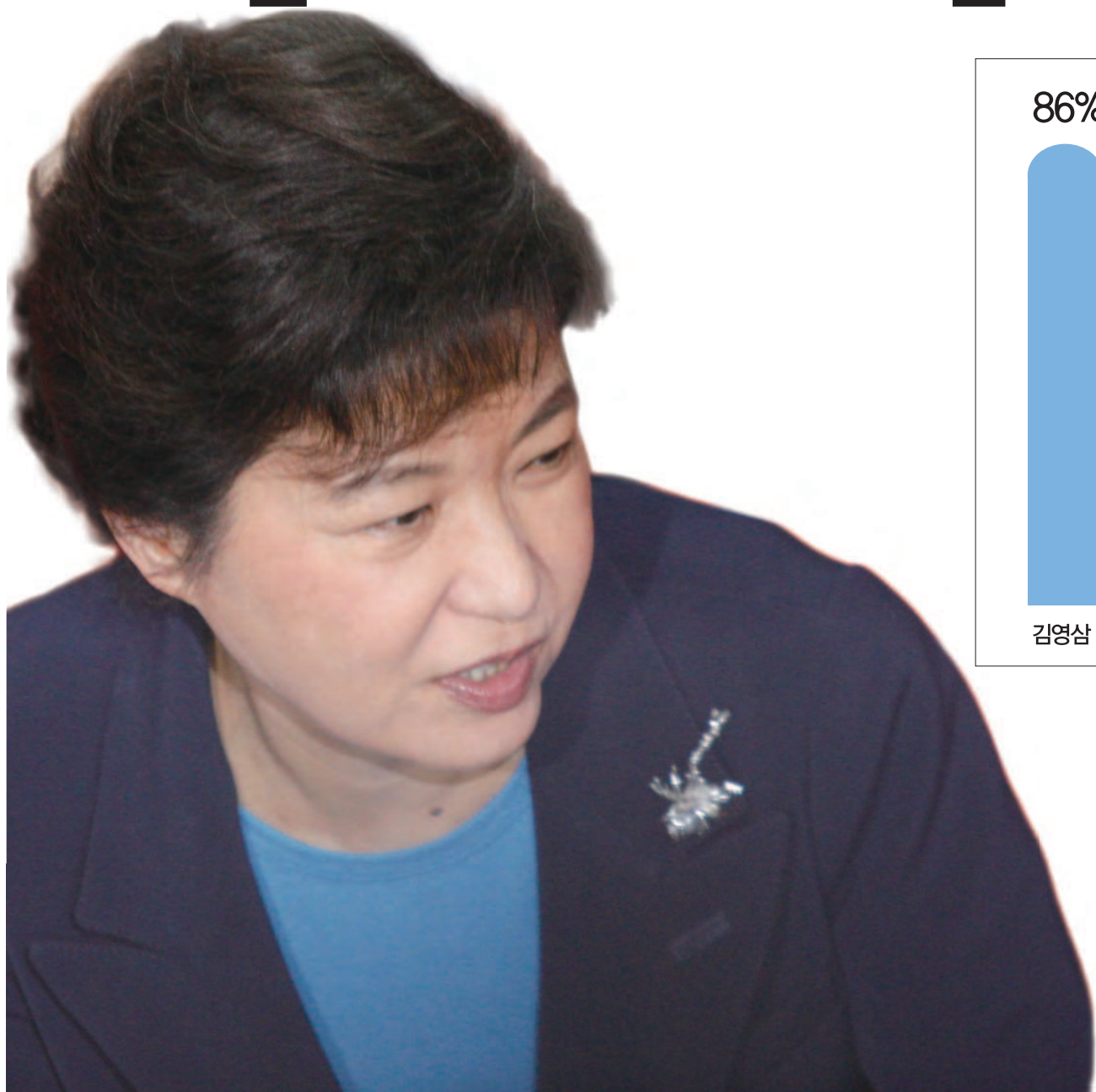
제98호 | 2013년 2월 18일 ~ 3월 3일 | 값 1,800원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 반자본주의 | 노동자 연대

레프트21

복지 먹튀, 극우 부패 인사, 밀봉 불통 행보, 대북 강경책, 노동자 절규 외면, 낮은 지지율 ...

시작부터 위기인 박근혜 정부



2월 25일 취임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의 실체가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박근혜는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 불리는 황교안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햇속까지 공간통’인 황교안은 1990년 《노사관계 주요 쟁점연구》라는 노동법 해설서와 1998년 《국가보안법 해설》, 2009년 《집회 시위법 해설》까지 이른바 ‘공간 3법’ 해설서를 발간한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황교안은 주로 굵직굵직한 시국 사건에서 악명을 떨쳐 왔다. 1980년대 KAL기 폭파, 임수경 입북 사건 수사부터 2002년 민주노총 위원장이던 단병호 전 의원 구속, 200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강정구 교수 수사까지 모두 이 자의 손을 거쳤다. 황교안의 ‘보안법 사랑’은 소름 끼칠 정도다. 그는 “사상의 자유는 ... 법률로 제한할 수 있고 그 법률이 국보법”이라면서 강정구 교수에 대한 구속 수사를 주장했다.

▶ 3면으로 이어짐

레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 (26개 호) 5만 원
2년 (52개 호) 10만 원

• 신청 : 02-777-2792, 웹사이트(www.left21.com)에서도 정기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일절 받지 않고, 독자·지지자 등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신문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하기 문의 02-777-2792 / left21@left21.com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후원 및 정기구독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우리은행 1005-301-422382 / 신한은행 140-008-401399 / 농협 301-0010-1643-71 / 하나은행 296-910007-15804

누구의 말일까요?

“내가 대통령이 돼서 한국이 세계 중심
으로 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
는 사실”

이명박, 이보다 더 재수없을 수는 없다

“박근혜님, 잘 들어 ... 한 가지는 절대
하지 마라. 코미디는 하지 마.”
박근혜가 지킬 수 없는 요구를 한 <개그콘서트>

“박근혜 긴급조치 1호, 그 누구도 나에
게 반말을 해선 안 된다.”
<개그콘서트>에 대한 행정지도를 비교는 네티즌

“제 가족들은 차차 신경쇠약 등에 걸리게
되는 것은 차치하고, 당장 이런저런 충격
에 졸도하는 등의 사태가 일어났다.”
총리 후보에서 낙마한 김용준

“법률가는 너무 돈을 탐해서는 안 되고
근검절약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물러난
김용준이 남긴 '명언'

“외아들이 군에 가서 아물어져서 오길
바랐는데 부모로서 너무나 안타까웠다.”
'보통사람' 정홍원(총리 내정자)의
소박한' 변명

“인터넷에 댓글 달다가 칼퇴근하는 꿈
의 직장 국정원”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비교는 네티즌

“심리전도 간첩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로
애국시민들의 자발적 협조하에 작
업할 수 있는 것”
국정원 관계자,
댓글 공작에 일반인도 연루된 걸로 나오자

“국정원 3대 임무 — 댓글, 미행, 고소”
한 네티즌

이마트 간부 : “버터! 우린 모른다고”
이마트 직원 : “저도 계속 잡아땀죠. 강
하게”
MBC의 노조 탄압 취재 도중
마이크를 단 채 뒤로 가서 대책 논의

“서울시청과 광화문 일대에서 수십 만
명이 모이는 '핵무장 촉구 국민대회'가
지속적으로 열려야 할 것이다.”
조갑제가 드러낸 우익의 본심

“세상법보다 교회법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하나님이 이 세상
보다 크고 앞서시기 때문”
황교안, 이런 자가 '법무'장관?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격주 월요일 (다음 가판은 3월 4일)
서울 건대입구역 4번 출구 오후 7:00~8:00 울산 현대차 4공장 구 정문 건너편 오후 2:50~4:00 울산 성남동 젊음의 거리 중부소방서 옆 오후 7:00~8:00 인천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오아시스빌딩 앞) 오후 7:00~8:00
격주 화요일 (다음 가판은 3월 5일)
서울 강남역 11번 출구 오후 7:00~8:00 서울 혜화역 4번 출구 오후 7:00~8:00 서울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오후 7:00~8:00 수원 수원역 지하상가 1번 출구 앞 오후 7:00~8:00
대형에서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6월 4일~6일)
이화여대 포스코관 지하1층 월요일 오전 11:20~12:20 서울시립대 학생회관 앞 화요일 오전 11:30~12:30 고려대(인암) 정경대 후문 화요일 오후 12:00~1:00 한국외국어대(서울) 인문관 앞 화요일 오후 12:30~1:30 충남대 공대2호관 앞(죽문) 수요일 오후 12:00~1:00

서점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그날이 오면(서울대입), 인사점(건국대입), 불무성(성균관대입), 이음책방(대학로),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역촌), 동방서림(울산 현대차공장 앞)

노회찬이 아니라 이견희·떡검이 유죄다

개악 밀어붙이려는 진보 속아내기를 막아야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가 국회 의원직을 상실했다. 2005년, 'X파일'에 나온 삼성 '떡값 검사'를 폭로한 '죄'다.

당시 폭로된 'X파일'은 한국 사회의 정·경·언·관 유착과 부패·비리의 실태를 보여 줬다.

노회찬 의원은 용기있게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해 삼성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런데 검찰은 '떡값 검사'와 온갖 비리를 저지른 삼성 회장 이견희 등은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되레 이를 폭로한 노회찬 의원과 MBC 기자를 기소했다. 도둑놈은 놔두고 도둑을 신고한 사람을 체포한 격이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은 노회찬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런 식으로 'X파일' 수사를 이끌었던 황교안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다음 날에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법과 질서'라는 게 정의롭기는커녕 부조리로 가득 차 있음을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 줄 수는 없다.

이번 판결을 앞두고 국회의원 1백 59명이 최종 판결을 미뤄 달라고 탄원까지 했는데도, 지배계급은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낸 노회찬 의원을 끝내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줄줄이 검찰에 계류돼 있는 진보 의원들의 앞날도 예고하고 있다.

현재 통합진보당 6명 국회의원 중 4명이 사법처리와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여 있다.

김선동 의원은 얼마 전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새누리당의 한미FTA 날치기 통과를 최루탄을 뿌리며 온몸으로 막은 '죄'다. 김미희 의원은 2백50만 원 벌금형(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총선에서 땅 4평(9백90만 원)의 재산신고를 실수로 누락한 '죄'다. 오병윤 의원은 2010년 민주노동당 탄압과 압수수색을 거부한 '죄'로



윤영준 제공 진보노조가 사진 촬영한 사진

“폐암 수술하며 폐는 그냥 두고 멀쩡한 위 제거한 꼴이다” 이것이 박근혜식 ‘법과 질서’의 실체다. 진보진영 공격에 맞선 연대와 방어 운동 건설이 필요하다.

기소돼 있다. 이석기 의원은 5개월간 진행된 검찰의 먼지털기식 수사 끝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중이다.

김재연·이석기 의원은 2월 임시 국회를 앞두고 또다시 새누리당의 ‘의원 자격심사’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적반하장

또 검찰은 이정희 후보가 ‘국민세금 27억 원을 먹튀했다’는 황당한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선다고 한다. 박근혜 저

격수 노릇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일 것이다.

저들의 의도는 명백하다. 노동자와 억압받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국회에서 파내겠다는 것이다.

또한 진보 의원들이 국회에서 기성 권력을 감시하고 그들의 치부를 폭로하는 걸 막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파 정부 당선과 새누리당 과반 국회 상황에서 온갖 개악들을 더 손쉽게 밀어붙일 수 있다는 속셈일 것이다.

이런 우파의 공격에 진보진영은 단결

해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현재 진보진영 내부의 분열상과 정치적·감정적 반목이 우파의 공격을 더 용이하게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진보 내에서 정치적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주류정당과 부패 우파, 검찰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

‘종북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진보진영 내에서 광범한 연대와 아래로부터 방어 운동을 건설하는 게 필요하다.

성지현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5대현안 10대요구 해결촉구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일시 : 2월 23일(토) 오후 2시 / 장소 : 서울역
주최 : 민주노총

열사정신계승 노동탄압분쇄 범국민대회
일시 : 2월 23일(토) 오후 4시
장소 : 서울 시청광장
주최 : 노동현안 비상사국회의

쌍용자동차 투쟁 승리 100일 문화제
일시 : 2월 28일(목) 저녁 7시
장소 : 쌍용차 평택 공장 앞 — 송전탑 농성장 앞
주최 : 쌍용차 범대위



전교조

동지를 내치라는 노동부의 명령을 거부하자

최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신입 지도부에게 규약을 시정해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라고 압박했다고 한다. 해고자가 선출직에 포함된 것도 문제 삼으면서 전교조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로 만들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이것은 조합원들의 자주적 의사에 따라 결정한 규약을 '개악'하라는 압박이다.

대법원의 현대차 불법파견 판정을 무시한 현대차 경영진들을 사실상 묵인방조해 온 노동부가 노조의 자주적 권리인 규약을 '개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위선적 이중잣대다.

임기 말까지 비리사법들을 사면해 악착 같은 극악무도함을 보여 준 이명박 정부의 노동부답다. 노동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도 전에 전교조 신입 지도부를 협박해 박근혜의 환심을 사려는가?

지배계급은 경쟁교육과 특권교육에 반대하는 전교조를 눈엣가시로 여겨 왔다. 지난해 1월에 전교조가 낸 규약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대법원이 기각한 것은 법이 과연 누구의 편인지 잘 보여 줬다.

이명박 정부에서 전교조가 많은 탄압을 받았듯이, 박근혜 정부도 물론 전교조를 탄압하려 들 것이다. 박근혜는 대선 토론회에서 전교조가 학교를 망치는 주범인 양 비방했고, 박근혜 당선 직후 일부 우익 언론들이 인수위에 전교조 척결을 주문했다.

듣기 좋은 복지 공약을 주섬주섬 끌어

전교조 탄압에 맞서

조합원 전체, 나아가

전체 진보진영이 단결하는

정치투쟁을 건설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왔지만 박근혜도 기업가들과 부자들을 위한 특권교육, 경쟁교육을 신봉한다. 박근혜는 자율형 사립고, 입학 사정관제, 교원 성과급 등 문제 투성이던 이명박의 핵심 정책을 대부분 잇거나 확대하려 한다.

교과부의 교과서 통제 강화 기도에서 보듯, 경제 위기가 깊어지면서 박근혜 정부는 교육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려 한다. 노동부의 노조 규약 '개악' 압박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될 전교조 탄압을 암시한다.

후퇴 반대

탄압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전교조 일각에서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규약을 '개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는 옳지 않다. 일제고사, 시국선언, 진보정당 후원 등 매우 정당한 조합 활동을 하다 해고된 조합원을 노조가 지켜주지 못하면, 노조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는 감소할 것이다.

규약 '개악'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사람들은 전교조가 많은 탄압을 받으면서 조합이 현저히 약화됐으므로 해고자를 무리하게 안고 가다가 법외노조가 되면 노조가 와해될 것이라고 걱정한다.

조합원들의 자신감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탄압이 강화될 경우 전교조가 큰 시련에 처할 수 있다. 게다가 노동조합 운동과 진보정치 운동의 상태로 분열 때문에 썩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 탄압에 실용주의적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닐 뿐더러 도리어 위험하다.

조직 보전을 앞세워, 해야만 하는 투쟁을 회피하면 자주적 결사체로서 노조의 결속력은 약화될 것이다. 악마에게 손가락 하나를 내밀면, 악마는 몸뚱아리 전부를 삼키려 들 것이다.

2010년 전국공무원노조 지도부가 국가 탄압 위협 앞에서 해고자 조합원 자격 규약을 '개악'했지만 이조차 합법성 쟁취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해고 조합원의 실질적 활동을 문제 삼아 전국공무원노조 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다.

더욱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조건이 꼭 같지도 않다. 이명박 정부에서 전교조가 많은 탄압을 받았지만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지는 못했다.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보다 더 강성 우파 정부이지만, 그렇다고 박근혜 정

부의 힘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강성 우파 정부도 얼마든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인사 위기로 박근혜는 취임하기도 전에 지지율이 50퍼센트 이하로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돌리려 한다면 박근혜는 큰 정치적 부담을 받을 것이다.

물론 박근혜 정부의 정치 위기가 심화되면 노조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것이고, 이런 공격의 일부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돌리는 시도를 감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계급 세력 균형 전체를 오른쪽으로 기울이려는 공격이므로 단호하게 맞서서 방어 운동을 광범하게 건설해야 전교조는 물론 노동운동 전체를 지켜낼 수 있다.

제대로 싸워 보기도 전에 실용주의적 양보와 후퇴를 할 게 아니라 노조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싸워야 한다.

오히려 지금은 전교조 탄압에 맞서 조합원 전체, 나아가 전체 진보진영이 단결하는 정치투쟁을 건설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전교조는 공무원노조를 포함한 노조와 노동계급 정치조직들과 광범하게 단결하는 정치투쟁을 건설해 탄압에 맞서야 한다.

전교조 지도부는 노동부의 규약 '개악' 압박을 거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전교조 활동가들은 규약 '개악' 압박에 단호히 맞서고 전교조를 방어하는 광범한 운동을 건설할 준비를 해야 한다.

박태현 전교조 교사

1%의 행복과 99%의 불행을 만들려는 박근혜 시대

▶ 1면에서 계속

이 자는 국가보안법 개정이나 폐지는 커녕 더 무자비한 적용을 위해 개악을 말해 왔다. “1991년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때 법에 주관적 요건이 추가”되면서 “종북세력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황교안 내정이 ‘공안통치’의 신호탄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황교안의 ‘법치’는 삼성 이견희 같은 부자들을 빗겨갔다. 황교안은 2005년 이른바 ‘삼성X파일 사건’을 총괄 지휘했는데, 이때 X파일에 거론된 ‘떡값 검사’들과 불법 로비를 벌인 전 삼성 부회장 이학수 등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병관은 육사 출신으로 휴대전화에 박정희와 육영수 사진을 달고 다니고 공공연히 “종북세력 척결의 결사대가 되겠다”고 말하는 자다. 한 무기 업체의 고문으로 일한 부적절한 경력도 드러났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 윤병세 역시 “확고한 안보관”을 갖고 있다.

그래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인 육사 출신 김장수를 중심으로 김장수·김병관·윤병세라는 ‘대북 강경파 삼각편대’가 ‘완성’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심지어 박근혜는 경호처를 경호실로 승격시키고 경호실장에 육참총장 출신 박흥렬을 앉혔는데, 이것은 박정희 시절의 막강 실세 경호실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핵심 요직을 육사, 법조인 출신들로 채우는 것을 두고, 박근혜 인사 스타일이 “5~6공 시절의 육법당”을 생각나게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상임위를 국회에 새로 설치하기 위해 환경노동위원회는 없애자는 말까지 나온다. 이명박 정부가 ‘반노동’이었다면 아예 이제는 ‘무노동’으로 가려는 것이다.



지금의 낮은 지지율도 박근혜의 행태에 비하면 과분하다 박근혜는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가져없이 짓누르려 할 테지만 박근혜 정부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다.

가장 많은 노동자의 죽음과 가장 많은 노동자들의 고공 농성 속에 취임하는 이 ‘말 바꾸네’ 정부가 집권 후 본격화할 공격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

최대 명절을 칼바람 부는 철탐에서 보내는 노동자들에게 박근혜가 선사한 설날 선물도 침탈 협박과 철거 시도밖에 없었다.

먹구름

요컨대, 취임을 앞둔 박근혜의 최근 행보는, ‘법과 질서’를 내세워 ‘공안 통치’를 하며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가져없이 짓누르는 ‘국민불행시대’의 시작을 예고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앞날에는 벌써 먹구름이 끼었다. 최근 박근혜 지지율은 48퍼센트까지 내려가, 1987년 직선제 이후 역대 당선인 중 최저를 기록했다.

여기에는 김용준 등 인사 실패, 밀봉 인사 논란, 무엇보다 복지 공약 말바꾸기가 크게 작용했다. 박근혜는 기초노령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현재의 2배’로 지급하겠다고 말했지만,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 부담’ 공약에 대해서도 원래부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었다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으로’도 껌테기가 됐다.

이런 복지 공약 말바꾸기와 ‘먹튀’는 계속될 수 있고 이것은 박근혜 지지 기반을 계속 좁아먹을 것이다.

새로 내정된 인사들이 ‘검증’을 견뎌낼지도 지켜볼 일이다. 이미 새로 내정된 인사들의 병역 면제, 부동산 투기, 편법 증여 등의 문제들이 도마에 올라 있다. 박근혜 보좌 인물의 비리 연루설도 벌써 불거졌다. 국정원의 불법무도한 대선 선거 개입 의혹도 갈수록 지저분한 실체를 드러내며 분노를 낳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가장 많은 노동자의 죽음과 가장 많은 노동자들의 고공 농성 속에 취임하는 이 ‘말 바꾸네’ 정부가 집권 후 본격화할 공격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

이현주

박근혜를 지켜 주고 성공을 바라야 할까?

최근 ‘진보개혁진영이 오히려 박근혜의 성공을 바라고 지켜 줘야 한다’는 주장이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다.

〈한겨레〉성한용 기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기대한다”, “박근혜를 지켜라”는 칼럼을 연달아 써냈다. 김종업 교수는 “박 당선인의 성공을 기원하는 것을 넘어 그에게 공약 탈출을 권고하는 집단과 싸우며 그를 ‘성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통합당은 ‘발목잡는 정당에서 탈피해 대안정당이 되겠다’며 이 방향에 앞장서고 있다. 민주당의 이런 입장이야 예상할 만한 일이지만 진보진영의 일부에서도 이런 흐름에 호응하는 분위기가 나오는 것은 우려스럽다.

물론 경제 위기 상황에서 새 정부의 실패와 복지공약 ‘먹튀’가 단지 정권과 그 측근들만이 아니라 다수 대중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를 지켜 주고 성공을 바라야 한다는 입장은 문제를 낳을 것이다. 이 같은 입장은 마치 박근혜와 우파·관료들의 지향이 대립되는 양 현 상황을 호도한다. 노동자·민중의 진정한 적이 누구인지를 흐리는 것이다.

유종일 교수는 〈한겨레〉칼럼에서 “민주주의 체제에서 선거는 선과 악, 아와 피아의 투쟁이 아니다”고 말한다.

그러나 박근혜는 이 사회 1퍼센트와 재벌·부자에 기반을 두고 그들을 대변하는 우익 정치인이다. 그는 박정희 독재와 5·16 쿠데타를 미화하고 국가보안법 사수를 주창해 왔다.

철저히 자본가 편에 서서 노동자를 짓밟으며 한국 자본주의의 경쟁력을 높이려 한다. 그래서 이 사회 지배계급은 일치단결해 박근혜를 지지한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는 당선을 위해 말로라도 경제민주화, 복지를 떠들지 않을 수 없었다. 집권을 해야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니 말이다.

지금 박근혜의 말 바꾸기는 개악을 본격 추진하기 전에 거짓 약속과 선심성 공약을 주위담는 과정이다.

유종일 교수는 “박근혜 당선인을 복지 쪽으로 ‘견인’해 내야, 다수 국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1퍼센트의 대변자 박근혜를 견인할 수 있다는 것은 공상이고, 도리어 박근혜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줄 뿐이다.

이런 주장이 만약 책략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적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를 속이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다.

독약

한편, 유종일 교수는 “야권과 진보진영을 위해서도 새 정부의 성공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실정은 야권과 진보진영한테 독약이 되었다. 반사이익에 눈멀어 쇠신을 외면하고 기득권에 집착한 것이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이명박의 위기는 진보진영에 성장의 기회였다. 오락가락하는 민주당의 지리멸렬함도 마찬가지였다. 이럴 때 진보는 독립적 대안을 제시하며 그 공백

을 파고들어야 했다. 그러나 진보진영의 일부는 진보적 의제들을 민주당 수준으로 용해시키면서 차별성을 흐리고 말았다. 통합진보당 사태까지 겹치며 진보진영은 기회를 유실하고 말았다.

지금 박근혜는 복지 공약 말 바꾸기, 부패 인사 임명 등으로 취임하기도 전에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이다. 이럴 때조차 비판과 폭로보다는 박근혜를 지켜 주려 한다면 진보진영은 또다시 성장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무엇보다 노획한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의 의원직을 박탈하고 ‘공안통’인 황교안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진보진영 옥죄기에 시동을 거는 박근혜의 성공이 진보진영에 이로울 리가 없다.

일각에서는 박근혜가 실패하면 더 강성 우파 정부가 들어설지 모른다고 우려한다. 성한용 기자는 “박근혜 정권이 실패하면 더 나쁜 정권이 들어설지도 모른다”고 주장한다.

박근혜가 약속을 어겨 저항에 부딪히고 이를 물리력으로 제압하려 하면 “식물 정권으로 전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임기도 채우기 어려울 수 있다. 국가와 정치 시스템 자체가 붕괴하기 시작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한다.

박근혜가 노동자들을 짓밟고 개악을 추진하다가, 저항에 부딪혀 몰락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진정한 사회적 변화는 아래로부터의 저항과 투쟁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2008년 거대한 촛불 투쟁은

임기 초반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추진 등 개악 드라이브에 부분적 제동을 걸며 주춤하게 만들었다.

복지 확대도 박근혜가 약속대로 해주길 기대하기보다는, 박근혜의 ‘먹튀’를 폭로하고 기층에서 저항을 건설할 때 실현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박근혜의 모순을 드러내고 폭로하며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고무시켜야 한다. 그 속에서 단결과 투쟁의 전진에 도움이 될 정치적 주장과 대안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진보진영이 전진할 기회가 생겨나게 될 것이다.

김지윤



진보의 진로 논쟁

어떤 정체성과 방향이 필요한가

김문성

박근혜 정부는 스스로 내포한 모순 때문에 위기로 나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자동으로 진보진영에게 기회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도 촛불항쟁으로 취임 첫 해부터 약해졌지만, 결국 정권 연장에 성공했다. 노동운동과 진보정치세력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분열하면서 기회를 못 살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보정치를 재건할 진로 논쟁, 즉 노선(정체성)과 세력의 재편에 관한 토론이 중요하다. 최근 이런 토론들이 재개되고 있다.

진보신당에선 1월 당대표 선거에서 진보정치의 연대와 노동중심성 문제가 논쟁됐다. 반갑게도 상대적으로 진보세력의 연대와 노동중심성을 강조한 이용길 후보가 대표로 당선됐다.

진보정의당에서는 최근 주요 간부 설문조사에서 절반 넘는 사람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진보정당으로서의 정체성 수립’을 꼽았다.

이 조사에서 ‘현존하는 나라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나라 모델’로 91.6퍼센트가 스웨덴을 꼽았다. 사회민주주의 모델을 지향점으로 꼽은 것이다.

사실 민주노동당도 민주노총 상층 지도부에 기반한 사회민주주의 정당이었다. 한국 노동운동의 정치적 발전 수준에서 부르주아 정당과 구분되는 좌파 사민주의 정당의 존재는 여전히 의미있다.

그러나 진보정의당 일부 지도자들은 이런 좌파 사민주의보다 더 오른쪽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인다. 주류 제도정치에 더 적응하며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과 거리를 두려는 것이다.

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이 “광화문이나 대한문 앞에서 집회나 농성을 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그는 “자족적인 투쟁 구호를 외치고 노래(투쟁가요)를 부르는 것”이라는 식으로 이 투쟁들을 폄하했다.



진보정당이 개혁을 성취하려면 아래로부터 제기되는 노동자투쟁의 일부이자 정치적 표현체가 돼야 한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는 “똑같은 임금을 준다면 비정규직, 파트타임(노동자)을 써도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여기서 두드러지는 것은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위로부터의 개혁’이란 관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니 “박근혜 정부와 전략적 동맹을 맺을 준비가 돼 있다”며 중재기구를 제안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초기에 ‘거대한 소수 전략’(대중운동이 중심이고, 의원은 그 스피커 구실을 해야 한다)을 내세웠다. 비록 실천에서 이 방향이 일관되게 구현되진 못했지만 말이다.

진보정의당 일부 지도자들은 ‘사민주의에 대한 낡은 금기’를 벗어나야 한다며 이런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창당 강령에 “사회민주주의 한계 극복”이 들어간 맥락을 봐야 한다. 그것은 20세기 후반 유럽 주류

사민주의 정당들이 신자유주의 정책에 투항하면서 실패한 전철을 밟지 말자는 생각에서 나왔던 것이다.

20세기 후반의 복지국가는 2차대전 후 상대적으로 장기간 지속한 서구 자본주의의 호황을 배경으로 한다. 여력이 생긴 자본가들은 노동 대중의 개혁 열망과 투쟁이 더 급진화하는 것을 막으려면 양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낡은 금기?

그래서 1951년 영국에서 보수당이 정권을 잡았지만, 이전 노동당 정부 6년 동안 기틀이 잡힌 보편적 복지제도와 일부 기간 산업 국유화 노선이 후퇴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세계적 경기 후퇴 속에서 자본가들이 태도를 바꾸자, 주류 사민주의 정당들은 연이어 신자유주

의에 굴복했다. 자본주의의 성공에 기대서 개혁을 제공하는 전략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다.

이런 실패 때문에 근래에는 주류 사민주의를 비판하며 급진좌파 정치세력들이 성장했다. 그리스 시리자, 독일 좌파당, 프랑스 좌파전선 등이 최근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한국의 진보정당이 주목해야 할 것은 주류 사민주의(사회 자유주의)가 간 실패한 길이 아니라 이러한 급진좌파 세력의 성장이다.

진보정당들이 민주통합당 같은 부르주아 정당들과 구별되는 것은 그 기반 때문이다. 조직 노동운동 기반이 중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쌍용차와 한진중공업 투쟁들을 보자. 새누리당이 이를 골칫거리로 보고 민주당이 여야 협상의 거래가능한 쟁점으로 이를 다루는 것과 달리, 진보정

당은 그 투쟁의 일부여야 한다. 진보신당 대표 선거에서도 조직 노동운동과 연대를 강조한 쪽이 다수의 지지를 얻었다.

사실 지금 진보정당의 존재감 약화와 주변화에는 조직 노동운동의 자신감과 투쟁 수준이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이라는 배경이 크게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바로 그 운동의 약화에 노동계 진보정당의 잘못된 방향 추구와 분열이 한몫했다. 따라서 ‘조직 노동과 거리두기’를 하면서 주변화를 극복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는 진보정치 지도자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진보정의당 일각의 ‘현대화된 생활정당’으로의 우클릭 시도는 옳은 방향이 아니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박근혜마저 대선에서 표를 얻으려고 좌클릭해야 했다. 이럴 때 진보정당이 제도정치권에서 받아들일 만한 온건한 정책과 노선을 추수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민주당과 구분되는 진보정당의 존재감을 더 약화시킬 뿐이다.

진보정의당 지도자들의 이런 시도는 우리가 2011년부터 지적한 바, 유시민계와 연합해서는 진정한 진보의 원칙과 단결을 유지할 수 없다는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드러낸다.

그 점에서 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이 <레디앙> 대담에서 유시민계와 민주노동당계·진보신당계는 “혈연관계”가 됐다고 말한 것은 시사적이다.

같은 대담에서 진보신당 김중철 전 부대표가 “민주당과 정책으로 구분되고, 장기적으로 독자적 대중 진보정당을 추구하는 세력이 되려면 자본주의 극복의 원칙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고 한 말이 옳다.

물론 진보신당이 이에 바탕해 연대와 단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좋을 것이다.

앞으로 갈수록 박근혜의 모순과 정치 위기는 커져 갈 것이다. 진보진영은 원칙을 유지하며 투쟁태세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서 박근혜의 위기를 이용해 단결된 반격을 해야 한다.

진보정의당의 ‘사회연대’ 제안

박근혜 정부와 동맹할 자세가 아니라 투쟁할 자세가 돼 있어야

진보정의당 지도부는 2월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와 일자리와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동맹을 맺을 자세가 돼 있다”며 ‘(가칭)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사회연대협의회’를 제안했다.

강성 우파 정권과 진보정당이 “전략적 동맹”을 맺을 수 있다는 주장은 당혹스럽다. 불과 두 달 전 대선에서 반새누리당 연합에 적극 참여했던 진보정의당의 이런 태도는 놀랍기도 하다. 그러나 역사적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2011년 방한 강연에서 “이탈리아에서 ‘역사적 타협’ 이전의 인민전선은 기독교민주당이라는 공통의 적에 맞서 공산당과 군소 부르주아 정당들이 연합하는 것을 의미했다. ‘역사적 타협’이 획기적 반전인 것은 이 때문이다. 공산당이 오랜 적(기독교민주당)을 끌어안은 것이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이탈리아 공산당은 가장 큰 야당이었으면서도 기성 정치 구조에서 배제돼 있었다. 그래서 지배계급 주류와의 ‘역사적 타협’으로 이 정치 구조에 편입해

정치권력에 다가가려 했다.

진보정치세력이 주변화된 조건을 완화해 보려는 진보정의당 지도자들의 발상도 이와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진보정의당의 제안은 진보정치의 주변화를 더 심하게 만들 뿐이다.

사실 이런 제안에 ‘나름’ 노련한 정치책략이 섞여 있을 수 있다. 박근혜가 어차피 수용하지 못할 경제민주화와 복지, 양극화 해소(국민대통합) 등의 쟁점에서 일부분이나마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도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성공적인 책략이 될 수 없다. 러시아 혁명이 트로츠키의 말을 빌리면, “[이런 제안은] 책략이 아니라 한심한 자기기만이다. … 계급은 속일 수 없다. … 마치 딴 사람인 척하며 그들을 속이려 든다면 실제로는 적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친구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결과를 빚게 되고야 만다.”

즉, 진보정당 지지자들에게 박근혜 정부와 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성격에 관한 혼란과 착각을 부추킨다는 것이다.



누구와 동맹할 것이냐도 진보정당의 중요한 정체성 문제다.

실제로 노회찬 공동대표는 “[박근혜] 대선 공약은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라며 “못할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사과하고 … 야당과 국민의 동의를 구하면 된다”고까지 말했다.

이렇게 박근혜를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게 되면, 쟁점 주도권은커녕 진보정치

세력들이 더 주변화할 것이다.

진보정의당 지도부는 “강제로라도 박근혜 정부가 복지와 경제민주화에 성공하게 만들겠다는 각오”라고도 말했다. 이는 최근 박근혜의 공약 뒤집기가 관료와 우파들의 압력 때문이라고 보는 일부의 시각과 연결되는 듯하다.

그 점에서 일부 진보정의당 지도자들이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보편적 증세’를 말하는 것은 우려했다. 진보정의연구소 김형탁 부소장도 최근 조직 노동자가 양보해서 취약 노동자를 돕자는 ‘사회연대전략’을 되살리자고 나섰다.

그러나 박근혜 세력은 지배계급 주류 우파에 기반한 반노동자 정권일 뿐이다. 박근혜는 표가 필요한 선거를 앞두고 대중의 강력한 복지 욕구를 고려해 두꺼운 화장을 했던 것이다.

경제 위기 조짐을 배경으로 그 화장이 갈수록 지워지는 상황에서 진보정치세력의 할 일은 그것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일이어야 한다.

그 점에서 “사대 매국의 뿌리, 분단 독재로 자신의 권력과 부를 유지해 온 집권 수구 세력은 [동맹이 아니라] 청산의 대상”이라고 일갈한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의 말이 옳다.

진보정의당 지도부의 박근혜 동맹 제안은 철저히해야 한다. 진보정치세력이 동맹해야 할 것은 진보진영과 노동운동, 각종 사회운동들이다.

북한 핵 20년의 역사

벼랑으로 내몰며 생떼를 부려 온 미국

한규한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한은 끝내 핵무기 개발로 나아갔다. 노동자를 억압·착취하며 군사적 경쟁에 매달리는 것은 북한이 남한과 다를 바 없는 체제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북한을 그런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은 미 제국주의였다는 점을 봐야 한다.

북한 핵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란이 된 시점은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은 탈냉전 이후 자신의 패권이 왜 존속돼야 하는지를 세계에 입증할 필요가 있었다. 미국은 과거 소련을 대신할 악마들을 발명해내기 시작했다. 이라크와 북한이 낙점됐다.

북한 핵 문제는 북한을 악마화하는 데 핵심 코드였다. 그때까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북한의 영변 핵 시설이 갑자기 국제정치 무대에 등장했다.

소련 해체 이후 북한은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합류하고자 안간힘을 썼다. 유엔 남북한 동시 가입을 추진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도 수용했고, 심지어 주한미군 주둔도 인정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 핵을 문제삼아 북한을 고립시키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북한 핵 검증을 빌미로 북한과 일본의 관계정상화 시도도 가로막았다.

미국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핵재처리까지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NPT 가입도 안한 이스라엘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핵무기 제조를 도우면서 말이다.

또, 미국은 틈만 나면 북한더러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라고 했다. 핵미사일을 탑재한 미국의 핵잠수함이 주기적으로 남한에 입항하면서 말이다.

어쨌든, 북한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북한의 1992년 IAEA 사찰 수용도 미국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 IAEA는 사찰 결과가 부족하다며 미신고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했다. IAEA 역사에서 전례가 없던 특별사찰 요구를 북한은 거부했다. 북한은 1991년 걸프전 당시 IAEA 사찰관들이 폭격 대상이 될 이라크의 주요 시설의 정보를 미국에 넘겨준 사실을 기억했던 것이다.

그러자 미국은 북침 전쟁연습 중단 약속을 파기했고, 북한은 급기야 NPT 탈퇴 선언을 했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1994년 영변 핵시설을 폭격하려 했다. 끔찍한 재앙 일보직전까지 갔던 이른바 1차 북핵 위기는 가까스로 제네바 합의로 봉합됐다.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대신 핵무기로 전용이 어려운 경수로를 북한에 건설해 주겠다는 것이 합의의 골자였다. 고(故) 리영희 교수는 이것을 “북한의 군사적·정치적 후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제네바 합의 이행에 협조적이었다. 미국 국무부조차 “전체적으로 북한의 협력은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이었다.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목록은 끝이



북한 핵과 미사일은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 이명박의 '비핵 개방 3000'이 만든 것이다.

없었다. 북한 미사일 개발과 그 수출 문제, 인권 문제, 비자금 조성 문제, 심지어 재래식 무기 감축 문제 등등. 이는 북한을 완전히 발가벗길 때까지 지속될 것이었다.

미국은 그러면서 자신들의 약속 이행은 사사건건 지연시켰다. 1996년에는 제네바 합의와 전혀 무관한 북한의 미사일 수출 문제를 꺼내 들고는, 경제 제재를 풀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1998년에는 근거도 없이 금강리 핵시설 의혹을 제기하며 사찰압력을 가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인공위성(또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듬해인 1999년 서해에서는 남북 경비정 간에 교전이 발생했다.

강패짓

이 위기는 북한이 금강리 시설 사찰을 수용하고(그 결과 핵시설이 아님이 판명됐다), 미사일 협상이 진전되면서 봉합됐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2000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었다.

사실 미국이 금강리 핵시설 의혹을 제기하고, 미사일 문제를 제기한 것은 대중국 견제 정책인 미사일 방어(MD) 체제 구축을 위한 것이었다. 미국은 이런 소동

을 이용해 일본을 MD 체제에 끌어들이 수 있었다.

2001년 조지 부시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사실상 모든 대북 협상을 동결시켰다. 북한은 미국의 대테러 국제공조에 협력할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12월 작성된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부시는 북한을 핵무기 선제공격 대상으로 올려놨다. 이는 명백히 제네바 합의를 강그리 짓밟는 행위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듬해 여름 '2차 서해교전'이 발발했다.

부시가 새로운 북한 압박 카드로 제시한 것은 이른바 2002년 10월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의혹이었다. 당시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의 진위 여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물론 당시 한반도에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이 존재했던 것은 확실하다. 미국한테는 알 곳게도 2000년에 남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추출했던 사실이 뒤늦게 발각됐던 것이다. 그렇다고 남한이 경제 제제와 가혹한 사찰 압력을 받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어쨌든 부시의 새로운 의혹 제기는 두 가지 성과를 거뒀다. 첫째는 이라크 침략에 대한 의회 동의를 앞두고 '대량살상 무기 색출 필요성'을 환기시킨 것이다.



2012년 6월 제주 남방 해역에서 진행된 한·미·일 연합 해군 훈련.

둘째는 일본의 대북 접근 시도에 다시 쐬기를 받는 것이었다.

부시의 강패짓에 직면해 북한은 2003년 1월 NPT를 다시 탈퇴했다. 그 후 한동안 북한 핵 문제는 교착 상태로 유지된다. 부시는 이라크 전쟁에 전념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은 핵능력 강화에 주력했다. **북한한테 이라크 전쟁의 교훈은 명백했다. 즉, 만약 이라크가 러시아제 야채깍통(미국은 이를 핵시설의 일부라 주장했다가 망신당했다) 대신에 진짜로 핵무기를 보유했다면 침략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심지어 이라크는 대통령궁까지 살살이 사찰을 받은 나라인데도 침략을 당했다.

결국 북한은 2005년 핵무기 보유 선언을 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열린 6자회담에서는 9·19 공동성명이 발표돼 다시금 대화의 국면으로 이행하는 듯했다. 그러나 9·19 합의는 그야말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미국의 새로운 의혹 제기(이른바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을 통한 북한의 비자금 조성 문제)로 휴짓조각이 돼 버렸다.

북한은 2006년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에 따른 제재에 맞서 결국 최초의 핵실험을 강행했다. 그 뒤 부시는 이른바 2·13합의, 10·3합의를 거쳐 상황을 봉합했다. 이는 진창에 빠진 이라크 전쟁과 이에 따른 미국 힘의 한계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봉합도 3년을 넘기지 못했다. 부시의 뒤를 이은 오바마 역시 합의 이행은커녕 '선 핵사찰 후 대화'를 고수하면서 상황을 원점으로 되돌려 버렸다.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은 그동안 판에 박히게 되다시피 후속 대화로도 이어지지 않았다. 미국은 심지어 중국의 6자회담 재개 요구조차 묵살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이 지역의 긴장은 급속히 높아졌다.

▶ **관련기사** 16면

선제 타격과 핵무장까지 떠드는 한국 지배자들

김영익

북한 핵실험에 대해 한국 지배자들이 위험천만한 호전적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합참의장 정승조는 “[핵무기]를 맞고 전쟁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제거하고 전쟁하는 것이 낫다”며 살기등등한 “선제 타격”론을 서슴없이 뱉어 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전역을 타격할 신형 미사일의 조기 배치, 공격형 방어시스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구축 등 군비 증강에 박차를 가할 참이다.

또한 일부 우파는 이번 기회에 핵무장으로 한 걸음 전진하려는 의도도 드러내고 있다. <조선일보> 고문 김대중은 한국도 핵무장을 해 “동북아시아를 ‘핵 공포의 균형 지대’로 만들자”는 섬뜩한 주장을 내놓았다.

우파의 일부는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한반도로 들여와 북한과 핵균형을 이루자는 주장도 하고 있다. 당장 핵무장을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일본처럼 핵무장의 잠재력은 보유하고 싶은 게 한국 지배자 다수의 열망일 것이다.

박근혜는 당선 후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가능하게 하자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2020년까지 달 탐사선을 보낼 로켓을 개발하겠다고 한다. 당연히 이런 계획의 이면에는 한국 지배자들의 군사적 야망이 숨겨져 있다.

따라서 지난 나로호 발사 성공은 남북 간 군사 경쟁을 부추기는 일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진보진영이 나로호 발사를 무비판적으로 환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발톱을 드러내는 박근혜의 대북 정책

이번 핵실험을 거치며 박근혜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대선 때 박근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이명박 대북 대결 정책의 실패를 벗어나겠다는 박근혜의 대북 정책은 처음부터 모순이 있었다.

박근혜는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신뢰’를 회복해야, 남북 교류를 활성화하고 북한 경제를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는 지난 5년 동안 남북 관계를 망친 이명박의 ‘비핵개방 3000’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입장이다.

또한 당선 전부터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해 “대북 억지력 강화와 국제공조”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

당선 이후 박근혜는 대북 정책에서 더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구체화한 인물로 알려진 상대적 온건파 최대석은 인수위에서 밀려났다. 반면 강경 우익인 김장수가 국가안보실장에 내정됐다.

북한 핵실험 후 박근혜는 이미 대북 압박을 위해 군비 증강과 미국과의 군사 공조 강화를 천명한 상태다. 박근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강력한 억제에 기초한 것이지 유화 정책이 아니다**”고 뜻을 밝혔다.

민주통합당과 자유주의자들은 이런 우파에 타협하고 있다. 민주당은 ‘안보예선 다들 게 없다’며 강력한 대북 제재를 촉구하는 국회 대북 결의안 통과에 앞장섰다.

유엔 대북 제재를 지지한 중국의 딜레마

중국은 1월 23일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찬성했다.

미국은 이를 통해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사실은 ‘제국주의 열강들’)가 한 목소리로 북한 핵과 로켓 개발을 반대한다는 점을 과시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입술과 이’라는 북한과의 동맹 관계에도 불구하고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 찬성했을까.

중국은 수백 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제국주의 국가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따라서 중국 지배자들도 제국주의 열강들의 핵무기 독점 체제를 유지하는 데 이해관계가 있다. 북한 핵개발이 일본 재무장의 명분이 되는 점도 골치가 아프다.

중국이 북한 핵 문제가 불거지면 독자 제재 등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곤 했다.

2차 북핵 위기가 불거진 2003년 봄 중국은 북한과 연결된 송유관을 일시적으로 잠근 바 있다. 2006년 1차 핵실험 때도 원유 공급량을 대폭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 지배자들은 북한 핵이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포위하는 명분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따라서 대북 압박이 자칫 미국과 일본에 맞선 중국의

‘전략적 자산’인 북한을 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까 우려한다.

적어도 2009년 2차 핵실험 후부터는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중시해 경제 교류 등을 강화해 나갔다. 그래서 중국 지배자들이 형식적인 대북 결의를 넘어서, 미국 주도의 강력한 제재 조치에 동참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듯하다.

김영익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저들이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에서 거의 모든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해 왔다. 미국의 레이건 정부와 영국의 대처 정부는 이를 이끈 대표 사례일 뿐이다.

민영화는 1970년대 이후 침체에 빠진 세계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조처로 여겨졌다.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정부한테 민영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였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민영화 조처에도 경제 위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경기 회복이 있기는 했지만, 세계 자본주의는 여전히 1970년대 이전 수준의 이윤율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오늘날 세계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 규모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이 경제 위기가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따라서 이런 물음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수십 년 동안 민영화가 체제 전체에 진정으로 끼친 영향은 무엇이었는가? 도대체 저들은 왜 여전히 민영화를 추진하려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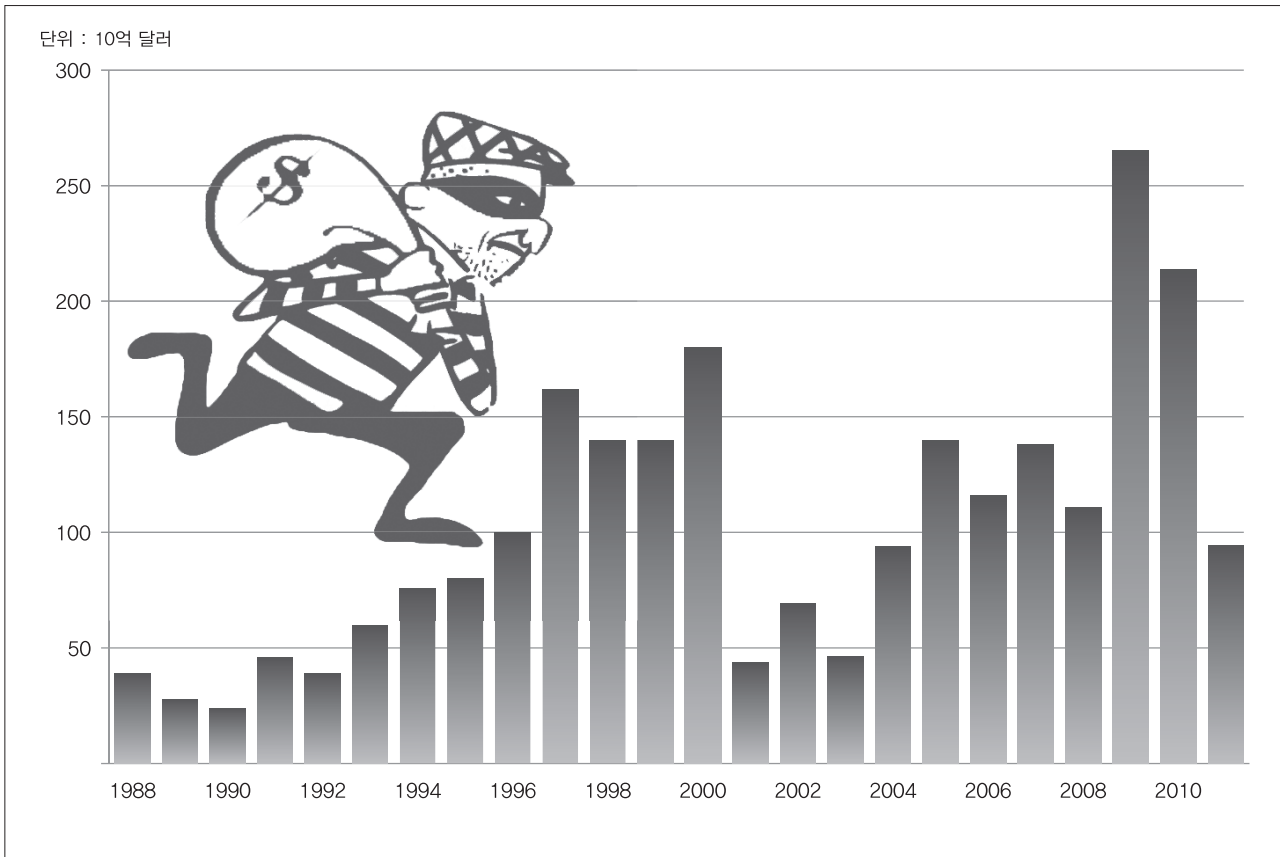
이 물음에 답을 얻으려면 좀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제 전체를 봐야 한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부터 ‘장기 호황’ 시기(제2차세계대전에서 1970년대 초까지)에 이르기까지 약 50년 동안, 대세는 민영화가 아니라 국유화였다. 히틀러뿐 아니라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가가 주요 산업을 국유화했다.

각국 정부들은 1930년대 대공황을 겪으면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그중 하나는 거대 자본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세계 시장에서 국민국가의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지배계급이 낱알의 사적 소유주로서 착취하기보다 그들이 장악한 국가를 이용해 집단으로 착취할 때 훨씬 효과적이었다는 것이다.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는 흐름은 1970년대까지 계속됐는데, 구소련과 동유럽 같은 나라들뿐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서방 자본주의의 보루 구실을 한 한국과 대만에서도 국가가 통신·정유·항



전 세계 민영화 추이 민영화는 거대한 도둑질이나 다름 없다.

만·조선 등 주요 산업을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다.

세계경제가 호황을 누리는 동안 이런 믿음은 현실로 뒷받침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지적한 것처럼 이윤 추구 드라이브는 자본주의에 연속적인 변화를 낳는다. 한때는 당연시되던 것들이 의문시된다.

1960년대 말에 체제 전체의 이윤율이 추락하면서, 자본가들이 기존 투자에서 거두는 이익이 줄었다. 새로 투자할 곳도 찾을 수가 없었다. 정부는 즉각 기업에 대한 세금을 낮추라는 압력을 받았다. 설상가상으로 경기가 침체하면서 조세 수입 자체가 줄었지만, 실업자가 늘면서 복지 지출은 오히려 늘었다.

그 결과 나라 빚(재정적자)이 늘면 이는 다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꺾어먹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높아졌다.

감세와 복지 삭감, 공공부문 민영화 등으로 이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

가 커지게 됐다. 오늘날 신자유주의라고 알려진 정책들이 주류로 자리 잡게 된 배경이다.

민영화는 한편에서는 국가 지출을 줄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자본에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졌다.

신자유주의

오늘날에도 민영화를 추진하는 자들이 가장 큰 명분으로 삼는 것은 비용 절감과 효율 증대다. 그들은 국영 기업이 노동자를 필요 이상으로 고용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민영화의 효과를 평가한 국내외 연구에서 민영화로 생산성과 효율이 높아졌다는 결과를 얻은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2011년 12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표한 ‘공기업 민영화 성과 평가 및 향후과제’를 보면 “실증분석 결과 공적 지분율이 높을수록 노동생산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즉 공적소유권 기관의

경우 노동 투입 대비 효율성이 좋다.”

또 민영화를 통해서 수익성을 올린 경우는 정부 통제를 벗어나 가격을 맘대로 올려서인 경우가 많다. 통신사와 석유 등 에너지 기업 민영화가 대표적이다.

1990년대 중반 영국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민영화를 위한 매각 준비 단계에서 대규모 정리해고와 임금 삭감을 통해 수익성을 올린 경우도 많다.

그런 효과는 대개 4년을 넘기지 못했다. “11개 기업 중 7개는 경제 전체 성장률보다도 성장률이 낮았다.”

결국, 민영화는 경제를 살리지도 못했고 효율을 높이지도 못했다.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수익성 향상조차 민영화의 결과가 아니라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노동강도를 높여 얻은 것일 뿐이다.

노동자들이 민영화 정책에 맞서기 시작하고 자신을 지킬 방법을 습득하면서 이런 효과는 더욱 반감됐다. 반대로 KT처럼 정부와 사측이 노동조합을 체계적

으로 파괴해 노동조건이 크게 후퇴한 경우 다른 민영화 사례보다 더 큰 수익을 거뒀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민영화는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최대 골칫거리라고 지적한 이윤율 저하 경향을 거스르지 못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정부는 여전히 민영화를 추진하려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본가들의 ‘근시안적’ 태도 때문이다. 위기가 체제 전체로 확산될수록 자본가들은 장기적 계획보다 즉각적 대응에 매달린다. 개별 자본이나 국가의 관점에서 보면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지속가능성보다는 그 자신이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제 위기 이후 재생에너지 사업이 하향세로 접어들고 석유 기업인 엑손모빌이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하는 현상이 이를 잘 보여 준다. 체제 전체를 위해서는 자본가들도 기후변화를 멈춰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도 나서서 십자가를 짊어지려 하지는 않는다.

오늘날 국내외 대자본들은 국유 부문에 돈벌이 기회가 없는지 눈을 돌리고 있다. 이들과 수천 가닥의 연결로 연결된 국가 관료들과 주류 정치인들은 이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인다. 철도나 전력 기업을 나누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 일거양득이다.

장기적으로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다면 재벌·부자 감세도 더 늘리거나 오래 유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배계급 전체로 보자면 이데올로기적 필요도 중요하다. 지배자들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아니라 공공부문을 경제 위기의 원인처럼 보이도록 하려 한다. 이런 속죄양 삼기를 통해 시장과 경쟁이 최선이라는 믿음을 퍼뜨리려 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들은 모두 노동계급에는 재앙이다. 민영화를 막아야 하는 까닭이다.

전력 민영화

요금 인상, 환경 파괴하며 재벌 배불리기

박근혜가 “전력, 가스 등 독점 구조의 비효율 제거”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뒤, 전력·가스 민영화가 다시 추진되기 시작했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전력 부족을 빌미로 2020년까지 화력발전을 1천5백 80만 킬로와트 확충하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6차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SK, 삼성, GS 등 재벌 계열사 8곳이 12기의 화력발전소를 짓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늘어나는 화력발전 용량 중 74.4퍼센트를 재벌에게 맡기는 것이다.

4대강 사업에서 핵심적인 구실을 한 재벌 건설회사들이 이번에 화력발전소 사업자로 대거 선정됐는데,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건설사에 주는 특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경부는 2월 1일에 열린 6차 수급계획 공청회가 환경단체들과 발전노조, 한국전력노조, 가스공사노조 등의 반발로 무산되자, 1주일도 안 돼 다시 공청회를 강행하고 2월 중으로 계획을 확정하겠다고며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재벌들이 발전 사업에 대거 뛰어들고 정부가 이를 후원하는 이유는 민간 발전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기 때문이다.

한전이 재벌 발전소의 전기를 싸게 사 준 덕분에 이미 발전소를 갖고 있는 재벌들은 엄청난 이익을 거뒀다. SK E&S는 지난해 3분기에 65퍼센트에 이르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한편, 재벌들은 OECD 평균의 약 62퍼센트(2010년 기준)밖에 안 되는 싼 값에 전기를 받아 쓰고 있다.

우리 나라는 기업들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 사용량이 전체 전기 사용량 중 55퍼센트나 차지하고, 삼성전자, 현대제철, 포스코 등 상위 20개 기업이 전체 전기의 15퍼센트나 소비하고 있다.

재벌들은 발전 사업에 뛰어들어 비싼 가격에 전기를 판매해 높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거두는 한편, 싼값에 전기를 공급받아 보조금까지 챙기는 것이다. 이 비용은 높은 가정용 전기요금과 한전의 적자로 지원되고 있다.

‘GS전기’, ‘포스코전기’ 같은 식으로 재

벌 전기회사들이 한전을 통하지 않고 전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되면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실제로 전력산업이 민영화된 미국이나 유럽은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의 차이가 한국보다 더 크다. 발전 부문에 재벌들이 대거 진입하고 판매 부문까지 민영화되면, 가정용 전기요금은 대폭 오를 공산이 큰 것이다.

다른 한편, 민영화는 기후변화 대응도 무력화한다. 화력발전을 대거 늘린 6차 수급계획으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껌데기가 돼 버렸다. 이는 기업의 이윤을 우선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논리 때문이다.

재벌들은 이번에 석탄 화력발전소 설립에 대거 뛰어들었는데, 석탄 발전은 오염물질과, 기후변화를 낳는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지만, 원료비가 싸 더 큰 수익을 안정적으로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 파괴, 전기요금 인상만 낳을 전력 민영화를 저지해야 한다.

강동훈



6차 수급계획에 반대해 공청회를 무산시킨 노동조합과 환경단체 활동가들 본격적인 민영화를 막으려면 광범한 공동전선이 필요하다.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민영화, 협동조합, 그리고 국유화

2000년대 내내 광범하게 추진된 민자 SOC 사업의 결과는 민영화가 요금은 낮추고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말이 거짓임을 보여 줬다.

2000년 인천공항고속도로 개통 이후 고속도로 · 항만 · 철도 등 민자 SOC 사업에 쏟아 부은 손실 보조금은 2조 8천 6백46억 원에 이른다.((서울경제))

이처럼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어 기업들의 손실을 보전해 주고 있지만, 사업자들은 통행료를 잇따라 인상했다. 대선 직후인 지난해 12월 27일에 8개 민자 도로 사업자들은 통행료를 1백~4백 원씩 올렸다.

인천공항철도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다. 얼마나 재정을 파탄 냈으면 결국, 2009년 이명박 정부조차 국유화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투입된 1조 2천억 원도 결국 사기업주들에게 막대한 매각 차익을 안겨 줬지만 말이다.

이런 상황은 공공 서비스를 사기업에 맡기면 재앙이 따름을 보여 줬다. 또한, 민영화가 불가피한 게 아니며 정부가 원하면 국유화를 하는 것도 가능함을 보여 준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민영화에 대한 집착을 여전히 버리지 않았으며,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기만적인 미사여구를 동원한다.

소비자의 “선택”이니 “다양성”이니 하는 말들은 민영화가 처음 추진된 199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역대 정부는 이를 더욱 계승 · 발전시켰다. 그들은 민영화가 수십 년 동안 유지돼 온 “권위주의적”인 국가 권력을 축소하는 한 방법인 것처럼 포장했다.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등을 전면적 민영화에 대한 대안으로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효과를 낸다. 또 대기업들이 운영난에 허덕이는 협동조합들을 흡수함으로써 자기 몸집을 불리고 공공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해 준다. 결국 민영화의 또다른 경로



공공서비스는 이윤이 아니라 대중의 필요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

가 되는 것이다.

영국 웨스트 요크셔 지역 버겐쇼의 “학부모 연맹”은 영국 최초로 될 수도 있는 “학부모 운영” 학교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의 구상인즉 학교를 민간기업인 세르코에 넘기는 것이다.

세르코는 철도, 감옥, 이주자 구금 센터, 레저 센터, 과속차량 단속 카메라 등을 운영할 뿐 아니라 브래드퍼드, 월솔, 그리고 스토크 시의 교육청까지 접수하고 있으며 해군 기지에서 “선단 지원”을 담당하며 심지어 엘터매스턴의 핵무기 개발까지 관리하는 문어발 기업이다.

이 회사의 이윤은 올해 1억 9천5백만 파운드로 치솟았는데, 그 한 푼 한 푼이 노동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다. 세르코 회장 크리스토퍼 하이먼은 “우리

가 여력만 있다면 불잡을 수 있는 기회들이 사방에 널려 있다”고 했다.

사회주의자들은 국유화를 지지하며 중앙 · 지방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운영하길 바란다. 각급 정부는 그 책임성 측면에서 솔한 한계가 있음에도 어쨌든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됐지만, 사기업들은 그렇지 않다.

이윤 논리

선출된 정치인들에 대한 노동자들의 통제력이 아무리 적다 해도 사기업 시장에 대한 통제력보다는 크다. 만약 지지체장이나 의원들이 영리병원을 도입하거나 지방 의료를 폐쇄하려 한다면 자신을 선출해 준 주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기업 사장은 그런 압력을 받

지 않는다. 삼성이나 현대는 병원이 충분한 수익을 내지 못하면 보통 사람들의 필요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병원을 폐쇄할 수 있다.

민영화를 반대하는 데는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근거도 하나 있다. 우리는 공공서비스가 이윤이 목적인 사업처럼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본다. 오히려 서비스 이용자들의 필요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본다.

공공서비스를 이윤 획득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비즈니스 지상주의는 평범한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끔찍한 피해를 초래한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형태의 민영화에 반대한다.

물론 우리가 국유화를 완벽한 대안으로 여기는 것은 아니다.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듯이 정부는 결코 모범적 고용주가 아닐뿐더러 공공

서비스의 모범적 수호자도 아니다.

또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 통제가 곧 평범한 사람들의 통제를 의미하지도 않는다. 진정한 권력은 의회 바깥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자들은 궁극적으로 노동자 통제에 대한 요구도 제기해야 한다. 이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공적 소유뿐 아니라 노동자들에 의한 민주적 운영을 뜻한다. 즉 사장들이 아니라 선출되고 소환 가능한 노동자 위원회들이 모든 작업장을 접수하는 것을 뜻한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이윤이 아닌 공공선을 위해 경제를 운영함을 뜻한다. 또한 오늘날 사회를 운영하는 자본가들이 이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므로, 결국 그들을 몰아내고 완전히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자는 말이기도 하다.

정부의 철도 민영화 속도전

“관제권 환수는 안전을 위협하는 미친 짓입니다”

박근혜 취임 전에 철도 민영화의 대못을 박아 두려는 작업이 한창이다. 국토부는 KTX 민영화의 여건을 조성하려고 관제권 환수를 추진한 데 이어, 최근엔 법적으로 정해진 심의 과정도 생략한 채 모든 역사를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철도 관제권은 2월 19일 이후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철도공사에서 국토부(철도시설공단)로 넘어가게 된다. 이에 철도노조에서 관제 분야 업무를 맡고 있는 최근묵 운수조사국장에게 관제권 환수의 문제점과 폐해를 들었다.

“이명박이 임기 말까지 이러는 걸 보면, 무조건 철도를 민영화하고 싶은 겁니다. 박근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박근혜가 이명박처럼 씹히지 않으려면 KTX 민영화를 유보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99퍼센트는 한다고 봐야 해요.

그런데 정부가 빨리 KTX를 민영화하려는데 당장 걸리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특히 관제권이 그런 거죠.

왜냐? 정부가 민간 사업자에게 수서발 KTX를 넘기더라도, 관제센터를 통제하지 못하면 민간 사업자가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

열차가 수서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서역 · 서울역 · 용산역 등 여러 군데

서 출발하는 열차들이 어느 지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고, 상하행 열차도 피치 못하게 어느 구간에선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니 어느 차는 빨리 지나가고, 어느 차는 먼저 와서 대기하고, 어느 차는 진입도 못하고 서 있어야 하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관제권을 철도공사가 갖고 있으면 민간 사업자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겠죠. 민간 열차의 운영을 2~3순위로 밀어버릴 수 있거든요. 게다가 사고나 문제가 생길 때 대처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겠고요.

철도 운영에선 정시 운전과 안전이 생명이고, 이를 통제하는 관제가 심장입니다. 그러니 이 심장을 철도공사에서 떼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국토부는 ‘관제권 환수가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철도공사라는 운영자가 관제 업무를 맡으니까 안전은 뒀전이고 이익만 우선한다는 거죠.

이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관제사와 운영자가 하나로 통합돼야 훨씬 안전할 수 있어요.

구로에 있는 관제센터에 가 보면, 엄청나게 큰 화면에 전국의 무수히 많은 열차들의 움직임이 3분, 1분, 심지어 초 단위로 모니터링됩니다. 관제사들은 열차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구간마다 일종의 문을 열어 주고, 중간에 어느 구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열차를 세우기도 하죠.

심장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각 역의 로컬 관제원(현장 관제원)들과 계속 소통합니다.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면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로컬 관제원들은 관제실의 수족처럼 명령을 수행하는데, 이 명령이라는 게 실시간 떨어지는 구두 명령이에요. 그래서 상호 정확한 의사 교환이 잘 안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아찔한 순간들이 많답니다.

‘짬밥’이 쌓인 분들은 수화기에서 ‘지지직’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금세 다 알아들죠. 관록과 현장 경력이 곧 능력이고, 노하우와 집중력이 자산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기관사들, 수송원들, 역무원들, 신호 · 전기원들, 시설을 다루는 분들 하고도 계속 소통해야 해요. 유지 · 보수 업무 하시는 분들과도 항상 얘기를 많이 해야 해요. 작업 중에 열차 정보를 주지 않으면 큰일 나죠. 실제로 폐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통합적 소통 시스템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야 말로 안전을 위한 생명줄이죠.

국토부는 법을 뜯어고쳐 관제권만 가

져가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철도공사가 쌓아 온 1백 년의 역사, 적어도 최근의 신호시스템이 도입된 뒤 30~40년간의 끈끈한 협력적 시스템과 노하우를 메우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관제권을 환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닌 겁니다. 여기에 딸린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왜 이걸 굳이 하려는가? 안전이고 뭐고 민영화에 미친 거죠. 철도에서 돈 되는 것들은 다 잘라서 파는 데 미친 거죠.

국가인지, 장사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화가 나는 거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터뷰 · 정리 박설

KTX 민영화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은 소책자

〈KTX민영화 : 재앙의 신호탄 — 정치적 분석과 투쟁 방향〉

박설 외 지음 | 노동자연대다함께 | 72쪽 | 4천 원

구입문의 : 02-2271-2395 / alltogether@alltogether.or.kr

※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주소창에 bit.ly/ktbe를 입력하거나, 리디북스 웹사이트에서 'KTX'로 검색하세요.

박근혜 정부의 모순과 다가올 저항의 기회

전지윤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박근혜 정부가 등장하는 상황은 정말 짜증난다. 마치 군대 제대하고 나서 해병대로 다시 입소하는 기분이다. TV에 자주 나오는 박근혜를 보면서 인혁당 유가족의 심정이 어떨지 생각하면 정말 열 받는다.

먼저 박근혜가 어떻게 권력을 잡았는 지부터 보자. 민주통합당 쪽에서는 ‘이정희 후보 탓에 박근혜가 당선됐다’, ‘괜히 총편에 출연 안 해서 중도층을 새누리당에 뺏겼다’, ‘문재인이 현충일에 가서 이승만, 박정희에 참배 안 한 것이 실수였다’ 등 온갖 어처구니없고 잘못된 분석을 쏟아냈다.

그러나 진정한 이유는 지배계급과 우파가 박근혜 당선을 위해 모든 힘을 모았기 때문이다. 대선 직전 현직 대통령의 집권당 탈당 법칙이 깨질 정도로 저들은 똘똘 뭉쳤다. 저들은 물질적·정신적 생산수단뿐 아니라 국가기구까지 장악하고 있다. 이런 지배자들이 똘똘 뭉쳐서 지원하는 박근혜가 승리한 것이 놀랄 일은 아니다.

사실 1년 전만 해도 한나라당은 선거에서 연패하고 디도스, 돈봉투 사건 속에 흔들리고 있었다. 한나라당 해체의 위기였다. 저들은 이 위기를 간신히 넘겼다. 그리고 지난해 총선 때부터 박근혜를 중심으로 지배계급과 우파는 똘똘 뭉치기 시작했다. 심각한 위기의식 때문이었다.

첫째, 2008년 세계경제 위기가 해결되긴커녕 다시 심화하는 상황이 지배계급의 위기의식을 부추겼다. 동아시아에서 중미 간 제국주의적 갈등 격화가 들쭉 요쭉했다. 셋째, 이명박 5년을 거치면서 복지외 분배에 대한 대중적 요구가 높아진 것에 대해서도 지배자들은 우려가 컸다. 그래서 강성 우파인 박근혜를 내세워 위기를 돌파하고자 했다.

영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고(故) 토니 클리프는 1979년에 영국 지배계급이 마가렛 대처 뒤로 물렸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지배계급은 지금 뒤에 숨을 방패가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휘두를 칼이 필요한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총선 때도 새누리당이 승리했다. 하지만 그때는 통합진보당의 약진을 보면서 위안 삼을 수 있었다. 그런데 통합진보당은 총선 직후 자폭하기 시작했다. 통합진보당은 실물경제당이 됐다가 얼마 안 가 쪼개져 버렸다.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이 통합하면서 생긴 불안정과 모순이 그 근원에 있었다. 그래서 똘똘 뭉친 우파와 사본오열된 좌파의 구도 속에서 이번 대선은 일확천금 판가름났다. 진보 후보가 4명(이정희, 심상정, 김소연, 김순자)이나 출마해서 서로 반목했다. 이걸 보면서 노동자들은 ‘망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결국 동요하는 중간계급을 전인한 것은 똘똘 뭉친 지배계급과 우파였다.

강성 우파 정부

그러면 박근혜 정부의 성격을 보자. 이 정부는 ‘민주정부 10년’을 제외하고 지난 반세기 동안 이 나라를 지배해 온 전 통적 지배계급의 정부다. 대자본가, 언론사주, 군 장성, 고위 관료들이 그 핵심 기반이다. 박근혜는 이명박보다 더 정통 강성 우파다. 박근혜 세력의 흔적들을 보면, 주요 재벌과 조종종이 끌고루 얹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박근혜 세력은 박정희 시절부터 문쭈를 쥐고 재벌을 육성하면서 국가 주도도 자본을 축적해 왔다. 박근혜가 큰 정부를 내세우고 경제부총리를 부활시킨 것에서 이런 흔적을 볼 수 있다. 거대한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어서 ‘창입 국가론’을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 세력은 자본주의의 세계화 속에서 신자유주의를 앞장서 수용했다. 5년 전에 박근혜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국가 기간은 세운다) 공약은 신자유주의의 교리의 집약판이었다. 박근혜의 경제 브레인들인 이한구, 김광두, 강석훈 등은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자들이다. 그래서 박근혜 세력은 지금, 국가가 기술 혁신에 앞장서면서 경쟁을 촉진하고 민영화도 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둘째, 박근혜는 이명박 5년을 거치면서 불만과 분노를 쌓아 온 대중을 상대로 공격을 시작해야 한다. 게다가 박근혜는 노사정위원회 같은 완충 장치가 없거나 부족하다. 그래서 야마 야당과 국회회를 통한 ‘국민적 합의’를 시도할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포퓰리즘적 기반 때문에 노동조합과 NGO 등의 눈치를 봐야 한다. 따라서 합의는 순탄할 수 없다. 실제로, 민주당이 반대 시위를 하면서 이명박 5년 동안 국회에서 수많은 법안이 있었다.

이 때문에 박근혜는 우익 포퓰리즘적 기반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자본주의 국가는 지배를 이용해서 적어도 대중 일부의 지지를 조직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래서 이명박이 “친서민”을 말했다가, 그다음에는 “공정 사회”를 말했던 것이다. 박근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까지 약속했다. 그런데 박근혜는 이 약속을 지킬

박근혜 세력은 또 냉전 시절 한미동맹 속에서 군사독재를 하면서 자본 축적을 이뤘다. 그래서 이들은 친미·반공적이고 권위주의적이다. 물론 한국은 1987년 이후 민주화로 인해 국가 형태상 준(準)부르주아 민주주의로 변해 왔다. 즉 노동조합과 진보정당 등을 허용하고 있다.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민주적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지만 말이다.

그러나 민주화의 동력은 기층 노동자·민중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이었다. 박근혜 세력은 마치못해 뒷걸음질치면서 도 탐만 나면 이것을 되돌리고 싶어 했다. 더구나 경제 위기 심화 때문에 저들은 민주주의를 더 거추장스러워한다. 이것은 법관 출신들을 선호하는 박근혜의 인사에서도 드러난다. 특히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노동기본권 등을 거스르는 판결을 내렸던 자들을 선호한다. 박근혜가 당선하자마자 국가정보원이 진보인사 미행과 사찰을 하며 세 세상을 만난 듯이 설쳐대는 것도 의미심장하다. 박근혜는 국가보안법을 애지중지해 온 것으로도 유명하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법과 질서’를 내세우며 권위주의적 통치를 강화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박근혜 정부가 하려는 일은 ‘국민 안전과 경제 부흥’이라고 한다. 박근혜의 입인 국유에 대변인 윤창중은 ‘박근혜를 찍지 않은 48퍼센트의 반(反)대한민국 세력에게서 국가정체성을 지키면서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한 바 있다. 즉, 노동운동을 힘으로 억누르면서 위기에 빠진 한국 자본주의의 수익성과 경쟁력을 높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성격과 나아가려는 방향 때문에 우리가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트릴레마

그러나 우리는 박근혜의 모순을 잘 봐야 한다.

첫째는 박근혜가 최악의 경제·대외 환경으로 진입한다는 것이다. 경제 위기로 보자면 2008년보다 더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그때는 그나마 중국이라는 ‘비밀 언덕’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도 위기로 나가고 있다. 지정학적으로는 중일 간에 국지적인 충돌 가능성이 커져서 불안정하고 있다. 위기와 불안정이 심화하고 있는 이런 조건과 환경이야말로 박근혜의 운신의 폭을 근본적으로 제약할 것이다.

둘째, 박근혜는 이명박 5년을 거치면서 불만과 분노를 쌓아 온 대중을 상대로 공격을 시작해야 한다. 게다가 박근혜는 노사정위원회 같은 완충 장치가 없거나 부족하다. 그래서 야마 야당과 국회회를 통한 ‘국민적 합의’를 시도할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포퓰리즘적 기반 때문에 노동조합과 NGO 등의 눈치를 봐야 한다. 따라서 합의는 순탄할 수 없다. 실제로, 민주당이 반대 시위를 하면서 이명박 5년 동안 국회에서 수많은 법안이 있었다.

이 때문에 박근혜는 우익 포퓰리즘적 기반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자본주의 국가는 지배를 이용해서 적어도 대중 일부의 지지를 조직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래서 이명박이 “친서민”을 말했다가, 그다음에는 “공정 사회”를 말했던 것이다. 박근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까지 약속했다. 그런데 박근혜는 이 약속을 지킬



노동자의 죽음과 절규마저 외면하는 박근혜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다.

수 있다. 이것이 셋째 모순이다. 여기서 박근혜는 소위 복지, 중세, 재정이라는 세 가지 축이 서로 충돌하는 ‘트릴레마’에 빠져 있다. 박근혜는 매년 27조 원씩 5년 동안 1백35조 원이 드는 복지 공약을 해냈다. 이 돈을 마련하려면 중세를 해야 한다. 그런데 법안이나 소득세를 올리는 것은 박근혜의 핵심 기반인 재벌·부자들 이 결사반대한다. 국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국제발행은 재정건전성을 해친다는 우파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처럼 세 가지 방향이 서로 충돌하면서 박근혜는 골짜기를 찾지 못한다. 결국 복지 약속은 말 바꾸기와 ‘먹튀’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노령연금 2배 인상, 4대 중증 질환 무료 등이 이렇게 되고 있다. 이러면 박근혜를 지지했던 일부 중간계급과 노동계급의 후진부류는 ‘내 고향이 이뤄지는 나라라더냐’ 하고 배신감을 느낄 것이다.

셋째, 박근혜 세력의 고집병인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문제가 있다. ‘만사물용’으로 불리는 박근혜의 율케 서항회를 보자. 서항회는 코요롱, 포스코, LH공사, 저축은행 등 수많은 기업들의 감사, 사외이사, 고문 변호사를 맡아 왔다. 코요롱은 물 민영화와 연관돼 있다는 말이 나온다. 한홍구 교수는 박근혜가 육영재단 이사 외 영남학원 이사에서 모두 측근 비리로 물러나야 했다고 지적한다.

앞서 지적한 박근혜의 모순들은 서로 결합돼서 나타날 수 있다. 경제 위기 심화 속에 박근혜는 복지 약속들을 지키기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면 박근혜의 우익 포퓰리즘적 기반이 흔들리고 이탈할 것이다. 반야 여기에 부패 추문이 결합된다면 상황은 더 나빠진다.

그러면 다가오는 지방선거 등에서 ‘선거의 여왕’이라는 박근혜의 타이틀이 빛바랄 것이다. 이럴 때 박근혜의 중요한 강점이었던 우파 결집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투쟁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서 정치적 투쟁을 하고 박근혜의 모순을 폭로해야 한다. 또 이런 폭로를 이용해서 투쟁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우파 결집에 맞서서 노동자 연대를 주장해야 한다. 지금의 위기와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면, 박근혜의 위기가 자동적으로 진보의 기회를 만들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요즘 심상정 씨나 이정희 씨가 노동자 집회에 와서 ‘단결’을 호소하면 노동자들의 반응이 싸늘하다고 한다. ‘자기네들이나 잘 해라’는 분위기가 있다. 이처럼 노동계급 정치 조직의 분열과 반목이 노동운동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노동계급 정치조직들이 공동전선으로 뭉쳐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노동조합 파괴하고는 절대 함께할 수 없다’, ‘민주당에 기대는 개혁주의자하고는 함께 못한다’는 식의 종파적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 노동자 대중 속에 들어가서 대화하며 함께 공동의 행동을 건설하려 해야 한다. 노동자 대중은 ‘박근혜나 민주당이나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박근혜 당선 이후 절망을 느끼는 것이다.

최강서 열사 사망 때, 김진숙 씨는 이렇게 말했다. “나도 그렇고 강서도 그렇고 문재인을 정치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워낙 절박했던 만큼 변화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 기대는 노동조합 파괴나 개혁주의자와는 함께 못한다’는 태도를 취할 수는 없다.

준비된 변혁운동가들의 네트워크

물론 민주당에 녹아들거나 민주당의 ‘원곡 방’에 들어가는 기회주의적 입장과도 맞서야 한다. 이런 태도도 진보의 단결과 투쟁에 해악적이다. 참여당파의 통합이 낳은 결과 그걸 보여 준다. 따라서 민주당보다 왼쪽에서 좌파 개혁주의의 독립적인 정치 세력화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도 노동계급 정치조직들이 힘을 모아서 추구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근본적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팔짱 끼고 밖에서 논쟁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개입해서 함께 대화하며 투쟁을 건설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 속에서 변화를 꾀하는 것이어야 한다.

러시아 혁명가 트로츠키는 다섯 명의 노동자들에 대해 말한 바 있다. 가장 일관되게 싸우려는 좌파적 노동자와 항상 투쟁에 반대하는 반동적 노동자가 있다. 중간에서 세 명의 노동자들은 둘 사이를 왔다갔다 한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좌파적 노동자가 동요하는 세 명을 견인해서 반동적 노동자를 고립시키느냐다. 혁명가들의 전략과 전술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이 과제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는 근본적 사회변혁자들의 굳건하고 독립적인 조직이다. 민주적이고 단단하게 집중된 조직 말이다. 그런 조직이 있을 때 우리는 투쟁에 개입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박근혜를 폭로하고, 연대를 호소하고, 승리를 위한 전술을 제시할 수 있다. <레프트21> 같은 전국적 정치 신문은 이런 조직과 운동을 건설하기 위한 유용한 무기가 되어야 한다.

문정현 신부는 “박정희 18년도 견뎠는데, 지금은 일기라도 잊잖아” 하고 말한다. 박근혜 집권에 풀이 죽은 사람들이 다시 주먹을 불끈 쥐고 나서라고 독려한 것이다.

“준비된 1퍼센트의 대동방” 박근혜가 우리의 새로운 적으로 등장했다. 준비된 사회변혁가들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투쟁을 시작하자.

※ 이 글은 최근 필자가 한 연설을 축약·정리한 것이다.
 녹취 오정숙

2003년 2·15 국제 반전 시위 10주년

제국주의에 맞선 “슈퍼파워”가 탄생한 날

2003년 2월 15일은 세계사에 남은 날이었다. 워싱턴에서는 어처구니 조지 W 부시와 오만한 네오콘 정부가 “새로운 미국의 세기” 운운하며 이라크 침공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전쟁 발발을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았던 그 때 ‘테러와의 전쟁’에 맞선 “슈퍼파워”(<뉴욕타임스>)가 모습을 드러냈다.

전 세계 6백여 도시에서, 2천만 명이 넘는 대규모 반전 시위대가 거리에 출현했다. 1백만 명이 넘는 시위대가 거리를 가득 메운 도시들도 있었다. 심지어 TV 뉴스의 기상캐스터들조차 “내일 시위에서 행진하시는 분들은 날씨가 추울 듯하니 단단히 차려 입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며 일기예보를 마칠 정도였다.

거대한 존재감을 과시한 전 세계적 저항은 어느 나라고 할 것 없이 지배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고, 이후의 세계 정세를 결정지었다. 베트남 전쟁 이후 유례 없는 규모의 급진화가 세계를 휩쓸었다. 전쟁의 실화와 전쟁을 추진하는 체제에 대한 분노가 만연했다.

이날 한국에서도 “반전 운동의 막이 올랐다.”(<동일뉴스>) 서울에서만 5천여 명이 거리에 나왔다. 시간이 갈수록 반전 여론은 광범해졌고, 운동의 규모도 점점 커졌다. 몇 년 동안 수많은 청년들이 거리에 나왔고 급진화했다.

2003년 3월 20일에 부시는 끝내 이라크를 침공했지만, 5월 ‘승전 선언’ 이후에도 끊임없는 저항에 시달려야 했다. 정령에 맞선 전 세계적 반전 운동이 계속됐고, 무엇보다 이라크 민중의 저항이 분출했다.

부시는 ‘사법 쿠데타’라는 비난까지 들으며 재선했지만, 반전 운동은 굴하지 않고 되살아나 내오콘을 정치적 코너로 몰아넣었다. 결국 제국주의 세력은 패배했다. “악의 축” 이란으로 확산하려던 그들의 계획은 좌절됐다. 부시의 뒤를 이어 대통령인 된 오바마는 치욕적인 지정학적 패배를 감수하며 이라크에서 완전 철군해야 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이라크 침공 10년 이후 미국 제국주의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

10년 전 이맘때, 미국의 부시 정권은 자신이 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오만한 믿음에 도취돼서 이라크 침공을 준비하고 있었다. 10년이 지난 오늘, 미국은 어디쯤 있는가? 흔하디 흔한 미국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고, 더는 손쓸 수 없는 쇠퇴기에 있다고 한다. 지난 주 라디오 4의 (투데이)에서는 프랑스가 수행하는 말리 전쟁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미국이 쇠약해졌다는 증거라는 주제로 토론이 벌어졌다.

이런 관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심지어 일부 좌파도 미국이 이라크에서 겪은 패배의 지정학적 규모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물론 미국은 2007~2008년의 터미션했다. “중과나. 더 중요하게는 소수 수니파의 불안정서를 이용하고 수니파 반군의 중도적 부위를 매수하는 책략 덕에 이라크 상황을 다시금 안정시키긴 했다.

그러나 이라크에서 미국의 정치적 입지는 좁아져 왔다. 한때 미국의 앞잡이 정권이었던 말리키 정부가 미군에 초법적 위치를 보장하는 주둔군 지위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오바마 정권은 애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2011년에 훨씬 대규모로 철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베트남 패배 후 미국은 인도네시아 공산당을 파괴한 1965년 수하르토의 반혁명이 일어나고 일본·남한·대만 등 미국의 동맹들이 경제적으로 성장한 덕에, 아시아에서 패배의 충격을 만회한 바 있다. 그러나 중동에서 힘의 균형은 조금씩 위상



전 세계에서 거리로 나선것 수천만 명은 이후에도 반전 운동의 기반이 됐다.

“부시의 푸들”이라는 치욕적 별명을 얻었던 영국의 블레어는 간신히 총리 자리를 유지했지만 정치적 실물인간 처지를 면치 못했다. 이라크 전쟁을 지지했던 스페인 아스나르 정부는 선거에서 참패하고 권좌를 내놔야 했다. 한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거대한 반전 여론을 거슬러 이라크 파병을 강행한 노무현은 고(故) 김선일 씨의 사망 이후 지지 기반이 결정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새로운 저항의 세기’

반전 운동은 제국주의에 맞선 국제적 대안을 제시했다. 1999년 시애틀를 향한 이후 본격화된 반세계화(반자본주의) 운동이 반전 운동과 함께 새로운 저항의 세기로 바뀌어갔다. 제국주의를 위협하는 진정한 “슈퍼파워”가 무엇인지를 힘껏 보여 줬다.

전쟁이 계속되는 내내 제국주의에 맞서 투쟁한 중동의 투사들은 전 세계의 반전 여론이 그들

의 편에 서 있다는 것에 크나큰 자신감을 얻었다. 전쟁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수감됐던 이집트 활동가들은 국제적 반전 운동을 보며 환호했다.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아랍 혁명의 주축이 됐다.

물론 제국주의도 전쟁도 끝난 것은 아니다. 오바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1백 년 전 제1차세계대전 발발 당시와 비교”(마이클넬스타임스))될 정도로 불안하게 고조되고 있다. 그러므로 전쟁에 반대하는 모든 투사들은 제국주의에 맞선 투쟁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새로운 저항의 세기”로 바꿔버린 위대한 반전 운동은 그런 투쟁을 더 잘 견딜 수 있는 교훈과 영감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김민수



력해서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이 공산품을 수출하고 식량·원자재·첨단 기술 제품을 수입하는 데 필요한 화로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동에서 저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맞다. 정보분석기관 ‘스트랫포’의 조지 프리드먼은 중동에서 저자세를 취하는 것이 부시의 ‘모험주의’를 교정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공교롭게도 프리드먼 자신은 부시 정권 때 ‘모험주의’를 지지했지만 말이다.

프리드먼은 오바마가 말리에서 치를 고역을 프랑스에 떠넘긴 것을 두고, “테러”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기보다는 완화시키는 것에 만족하고, 다른 나라가 할 수 있는 싸움이라면 직접 말리들지 않는 식으로 미국 체제를 안정시키려는 것”이라고 봤다.

미국 제국주의는 이라크에서 패배하고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에 빠져 허우적대면서 약화돼 왔다. 미국 지배계급은 세계 자본주의의 체제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이 미국 지배계급이 지난 5년의 자본주의 위기로 인해 특별히 더 취약해진 이유다. 그러나 미국 자본주의가 여전히 중심적 구실을 하고 핵심적 자원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미국은 여전히 지배적 제국주의 국가로 남을 것이다.

출처 혁명적 반자본주의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339호 / 번역 김민수

특집

레닌주의는 끝났는가?

알렉스 칼라니코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장

최근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이하 SWP)의 안팎에서 ‘레닌과 볼셰비키 전통을 계승·발전시킨 혁명정당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논쟁이 벌어졌다. 이 논쟁 속에서 나온 알렉스 칼라니코스의 이 글은 오늘날 한국에서 레닌주의 정당을 건설하려는 활동가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축약되지 않은 전문은 <레프트21> 웹사이트(www.left21.com)에서 볼 수 있다.

최근 몇 주, SWP와 이 당이 구현하려 한 정치 전통이 종말을 맞이했다는 ‘선언’이 영국 좌파들 사이에 널리 퍼졌다. <가디언> 칼럼니스트 오웬 존스는 “SWP와 그 동료의 시절이 끝났다”고 발표했다. 존스 등은 SWP가 “레닌주의에 대한 교조적인 트로츠키주의 모델” 또는 “역사적으로 유효가 다한 모델”이라고 본다.

이 논쟁의 진정한 쟁점은 무엇인가? 1951년에 그 초석을 놓을 때부터, SWP는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가려 노력했다.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시작한 이 전통은, 볼셰비키당이 노동계급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끈 1917년에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진정으로 전통을 구현한다는 것은 끊임없는 창조적 혁신을 필요로 한다. 마르크스주의는 이론과 실천의 통합이므로, 혁신 과정은 지적인 차원과 정치적 차원 모두를 포함한다.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에서 이런 혁신 과정에 기여한 최근의 사례로는 크리스 하먼의 위대한 유작 <좀비자본주의>가 있다.

그에 비해 ‘자본주의를 타도하려면 노동계급 조직이 필요하다’는 마르크스의 정치적 유산에는 상대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점들이 있다.

SWP의 전신인 ‘국제사회주의자들’은 1968년에 레닌주의 조직 모델을 받아들여 이기로 했다. 즉, 1917년 러시아 10월혁명 때까지 레닌 지도 하의 볼셰비키가 취한 방식을 우리가 조직하는 방식의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는 것이다.

유연한 전술

사실, SWP의 창립자 토니 클리프가 레닌 전기<레닌 평전1 — 당 건설을 향해>, 책갈피>에서 밝혔듯, 볼셰비키의 정치 전술과 조직 방식은 매우 유연했다. 그러나 거기엔 몇 가지 공통된 요소들이 있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후 경험에서 확인된 것처럼, 노동자 투쟁은 자본주의 지배의 뿌리에 도전하는 혁명적 행동으로 거듭 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은, 자본주의 체제와 그에 맞선 저항 사이에 타협을 종용하고 체제를 용인하는 전통들에 의해 이런 혁명적 운동이 억제돼 왔다는 점도 보여줬다.

역사적으로 이런 전통의 가장 중요한 흐름은 개혁주의다. 개혁주의는 주류 사회민주주의와, 스탈린의 승리 이후 서방의 공산당이라는 형태로 주로 표현됐다. 그러나 다른 이데올로기를 가진 조직들이 비슷한 구실을 하기도 했다. 1978~79년의 이란 혁명과 오늘날의 이집트 혁명에서 나타난 다양한 이슬람주의가 대표적이다.

이런 [개혁주의] 전통이 지닌 영향력은, 자본주의가 노동계급의 의식을 파편화하고 계급 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더 작은 일부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부추기는 경향 때문에 강화돼 왔다.



이집트에서 열린 집회

레닌주의는 혁명가들이 논쟁과 운동 방향에 조직적으로 개입할 수단을 제공한다 이집트 혁명 속에서 중요한 구실을 해 온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RS)의 회원들.

그리하여 1871년 파리코뮌부터 1984~85년 영국의 광부파업까지, 대규모 노동계급 투쟁은 정치권력의 문제가 제기됐을 때 영웅적이고 가슴 뭉클한 패배로 끝나곤 했다.

1917년 10월의 경험이 그토록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볼셰비키는, 1917년 2월혁명으로 차르(러시아 황제)를 타도한 이후 몇 달 동안 압도적으로 강력했던 개혁주의의 (이 경우에는 멘셰비키와 사회혁명당의) 통제를 뚫고, 권력 장악에 대한 노동계급 다수의 적극적 지지를 확보했다.

이런 일은 볼셰비키가 흔히 말하는 “전위정당”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1917년 10월혁명 이전에 볼셰비키는 대부분의 시기에 러시아 노동계급의 소수만을 대표했다. 그러나 이 소수는 공통의 마르크스주의적 세계관을 토대로 단결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은, 이 이해를 바탕으로 조직하고 행동했다.

볼셰비키는 러시아 노동계급 투쟁에 집단적으로 개입했다. 개입하면서 그들은 그 투쟁이 발전하는 데 기여할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들은 동시에 노동자들이 정치권력을 위해 투쟁할 필요를 깨닫도록, 정치권력을 장악하도록, 볼셰비키를 지지하도록 노동계급을 고무했다.

그리하여 볼셰비키는 그들 자신과 동료 노동자들 사이의 지속적인 대화의 과정을 거쳐 노동계급 다수의 지지를 획득했다. 볼셰비키는 때때로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노동자들이 볼셰비키를 실제로 앞질러 나가는 것을 보며 배우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당은, 다양한 무리의 노동자들에게 생기는 경험의 불균등함과, 자본주의가 노동자들의 의식을 파편화하는 것을 극복해야 했다.

혁명가들로서 볼셰비키가 조직한 방법은 10월혁명이 타락하면서 잊혀졌다. 10월혁명은 신생 노동자 국가가 고립되고 내전과 경제 붕괴로 노동계급 자체가 파괴된 결과 타락하고 말았다.

1960년대 후반에 레닌주의의 기치로 모일 때, 우리는 볼셰비키당의 원래 방식을 적용하고자 했다. 하지만 우리는 볼셰비키가 맞선 것과는 다른 상황에 직면해야 했다. 노조 관료들에 뿌리내린 개혁주의가 차르 치하의 러시아에서보다 영국과 서유럽 국가들에 훨씬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고조되는 투쟁

다음으로, 이런 상황들은 끊임없이 변화를 겪었다. 1968년 즈음엔 고조되는 노동자 투쟁의 파도가 1974년 초 결국 히스 보수당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까지 나아갔는데, 우리는 1968년 이래로 방향을 바꿔 이 투쟁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런데 1974~79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노동자들의 투지를 가라앉혔고 노동조합 현장 지도자들을 경영 구조 속으로 포섭했다.

그리고 나서 1979년에 대처가 수상이 됐다. 대처는 히스가 시도했던 자본가들의 공세를 성공적으로 재가동했고, 광부를 비롯한 몇몇 핵심 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을 꺾었다. 대처 정권과 미국의 레이건 정부 시절은 세계적으로 정세의 일대 전환기였다.

그들이 선도한 신자유주의는 무엇보다도 노동계급을 분열시키고 노동계급 조직을 약화시켜 자본의 이윤율을 회복시키려는 것이었다. 그 효과는 모순적이었다. 요즘의 세계경제 위기가 보여 주듯, 신자유주의는 근본에 깔린 이윤율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실패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더욱 분열됐고, 조직들은 약해져 갔다.

이것이 자본주의에 맞선 저항이 사라

졌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도리어 그 반대다. 근본적으로 아랍 혁명은 신자유주의가 이집트, 시리아, 튀니지 같은 나라들에서 양극화를 심화시킨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럼에도 어떤 경향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다.

첫째, 노동계급의 주류 정치 조직들이 쇠퇴하고 있다. 한때 서구에서 가장 큰 정당이던 이탈리아 공산당은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우경화하고 시장을 받아들이는 등 신자유주의에 적응하려 해 왔다. 토니 블레어의 신노동당 프로젝트처럼 말이다.

이런 노선은 재앙으로 끝났을 뿐 아니라, 한층 더 분열해 있는 노동계급 안에서 ‘사회자유주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회민주주의 정당을 이렇게 부른다) 정당의 기반이 계속 쪼그라들고 있다. 이것이 개혁주의가 끝장났다는 의미는 아니다. 지난해 프랑스 대선에서 울랑드가 사르코지를 이겼고, 여론조사에서 노동당이 보수당을 앞서고 있다. 그럼에도 개혁주의가 점점 약해지고 있긴 하다.

둘째, 1999년 11월 시애틀 시위 이래로, 신자유주의나 때때로 자본주의 자체를 겨냥한 정치적 급진화의 물결이 일어났다. 2003년에 벌어진 이라크 점령에 맞선 거대한 항의 시위가 그 물결의 정점이었다. 2011년 아랍 혁명은 스페인의 5월 15일 운동과 맨해튼에서 전 세계로 번진 ‘점거하라’ 운동의 발생에 일조했다.

이런 운동은 엄청나게 중요하다. 하지만 이 운동들은 비슷한 수준의 노동계급 투쟁이 일반화하거나 심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물론, 노동자들은 중요한 구실을 했다. 같은 해 그리스에서 벌어진 총파업을 비롯한 노동자 투쟁, 2012년 11월 14일에 남유럽 전역에서 벌어진 파업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라.

거리나 공장이나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에 있었던 급진화의 중심에는 저항하는 노동계급이 있었지만, 오늘날의 급진화는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오늘날 투쟁이 가장 멀리 나아간 이집트에서조차, 호스니 무바라크를 타

도한 때부터 2년 동안 거리의 운동이 공장에서의 운동보다 더 중심이었다. 이 점에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야 하는가?

노동계급이 끝장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것이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우리는, 자본주의의 모순적이고 불균등한 팽창이 광범한 사회 계층을 임금노동자로 끌어들이는 것을 보았다.

그럼에도 현재 급진화 방식에서 드러난 것은, 자본주의에 맞선 투쟁에서 노동계급 투쟁의 중심적 구실이 과거에 비해 덜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세계에 더 깊이 연루되면서 주류 정당들이 위축된 것과 함께) 현대 반자본주의 운동에서 정치 조직이 미심쩍은 시선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레닌주의가 혁명적 조직이 취할 최선의 형태라고 여전히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것이 존스와 그 부류가 제기한 비판에서 드러난 중요한 쟁점이다. 점점 더 노동당 내의 지위가 높아지는 존스는 실제로 다음과 같이 쓰기도 했다. “노동당이 노동계급을 위해 싸우도록 강제하는 투쟁을 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그는 노동당을 좌경화하는데 활동가들이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1920년대 이래 몇 세대에 걸쳐 일부 활동가들이 추구해 온 프로젝트다.

노동당의 본질

[그러나] 노동당을 왼쪽으로 이끄는 투쟁이 실패한 것은 투지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노동당의 본질 자체가 그 당 내의 좌경적 도전을 꺾은 것이다.

노동당은 선거에 연연하기 때문에 투쟁을 위한 전술 토론과 지지 활동보다, 보수당과 상업 언론이 주도하는 선거 여론에서 이기기 위한 노력에 더 치중한다. 노동당 의회 지도부의 권력은 역사적으로 노조 관료의 사회적 영향력과 재정적 힘에 의해 뒷받침돼 왔다. 오늘날 노조의 존재는 여전히 노동당과 조직 노동계급을 이어주는데, 거기에는 대가가 따른다.

노조 상근 간부의 구실은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에게 착취당하는 조건을 협상

▶ 11면으로 이어짐

중국 자본주의의 모순과 시진핑의 위태로운 앞날

중국에서 다양한 투쟁이 벌어진다
는 것은 더는 뉴스거리가 아니다.
2011년과 2012년에만 각각 10만 건 이
상의 집단 행동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광둥성 선전부가 신년 사
설을 자의적으로 교제한 것에 항의해 발
생한 <남방주말> 사건은 특히 주목을 끌
었다.

<남방주말> 경제부가 파업에 돌입하
고 수백 명이 지지 시위를 벌일 때 세간
의 관심사는 '시진핑의 입장은 무엇인
가?'였다.

시진핑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
로 논평하지 않았다. 그러나 <남방주말>
사건은 시진핑이 앞으로 지배해야 할 중
국의 모습을 잘 보여 줬다. 오늘날 중국은
사회의 모순에 맞서 싸울 각오가 돼 있는 수
많은 평범한 중국인 - 노동자, 농민, 학생, 언
론인 등 - 들로 가득하다.

중국에서 온갖 사회 모순이 산적한 상
태에서 새 지도부가 들어선 것은 처음이
아니다. 10년 전 후진타오와 원자바오가
집권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1990년대 급격한 시장화 과정을 거친
후 계급 간·지역 간 소득 격차는 사상
최대였다. 1990년대 중반부터 진행된
국영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최대 6천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농민들은 지방 관
리들이 부과하는 과중한 세금에 고통받
았다

이 중 어떤 것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보였고, 일부 공산당 고위 관리들
은 일당 통치에 종말이 올 수 있다고 경
고했다.

그러나 10년 뒤 중국 국영기업들은
<포천> 5백대 기업에 속하는 세계적 기
업으로 재탄생했다. 중국은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고 세계 모든 나라
지배자들이 쌍수를 들고 중국 지배자들
의 방문을 환영한다.

따라서 시진핑은 당시보다 유리한 조
건에서 집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점에서 시진핑 정부는 10년
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
을 해결해야 한다.

불안한 경제 전망

첫째, 경제 여건이 다르다. 2003년 세
계경제는 미국 연준의 과감한 조치와 함
께 호황의 문턱에 있었다. 또, 중국 경제
는 1990년대 흑독한 국영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부채 문제를 많이 해결한 상태
였다.

그러나 현재 세계경제는 대공황 이
후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다. 2012년
중국의 성장률은 7.8퍼센트인데, 이는
2000년대 중반보다 3분의 1가량 낮은
것이다. 이것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
앙정부가 새로운 사회기반시설 공사를
허가하고 자금을 푸는 등 경기부양 정

책을 편
덕분이다. 경
착륙 가능성을 배제하고
낙관적인 전망만 봐도, 2013년 성장률
은 2012년보다 약간 높은 8퍼센트대
초반 정도다.

더구나 정부는 2008년 시작한 대대적
경기부양 정책이 낳은 부작용 - 부동산
거품, 비효율적 투자와 악성 부채 문제
- 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확한 규모
를 알 수 없지만, 중국 총부채 규모는 국
내총생산의 1백80퍼센트가 넘으며 총부
채 중 최소 25퍼센트가 부실 대출인 것
으로 추산된다.

물론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총대출
이 거의 4백 퍼센트에 육박하는 것을 감
안하면 중국 지배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탄약'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앞으
로는 예전보다 일자리도 적게 창출되
고, 임금 상승률도 낮아지며, 경기부양
의 규모도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투쟁의 성장

둘째, 노동자·농민의 투쟁과 의식
수준이 크게 상승했다. 어떤 측면에서
는 경기 전망보다 이 점이 더 중요하다.
1930년대 스탈린은 러시아 경제가 엉망
진장인 상태에서도 노동자·농민에게
흑독한 자본 축적 과정을 강요할 수 있었
다.

사실 얼마 전까지는 중국에서도 그랬
다. 예컨대, 2005년 광둥성 동저우 마을
에서 토지 강제 수용에 항의하는 농민 투
쟁이 터졌을 때, 경찰은 주민들을 향해
발포했다. 20여 명이 죽고 50명이 다쳤
다. 주민들의 요구는 철저히 무시됐다.

그러나
6년 뒤 2011년 역
시 광둥성 우칸 마을에서
똑같은 문제가 터졌을 때
경찰은 감히 발포할 수 없었
다. 사람들은 우칸 지지단을 꾸려 경찰의
포위망을 뚫고 마을을 방문했다. 결국 광
둥성 정부는 민주적 총위원회 선거를 약
속하고 불법적으로 토지가 매각됐으면
반환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노동자 운동의 경우, 2000년대 초반
까지 진행된 국영기업 구조조정 반대 투
쟁은 대부분 고립돼 패배했다. 또, 당시
민간 기업에 고용된 민공(民工)들은 작업
장에서 투쟁하기보다는 직장을 옮기는
형태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소
극적으로 항의했다.

그러나 2010년 혼다 파업은 노동자
들, 특히 신세대 민공들이 훨씬 조직적으
로 투쟁을 벌일 자신감과 능력이 있음을
증명했다. 최소한 대규모 수출기업단지
에서는 사장들이 더는 투쟁하는 노동자
들을 예전처럼 막 대할 수 없다.

예컨대, 올해 1월 상하이신메이전자
의 경영진이 화장실을 2분 이상 사용하
는 노동자들에게서 월급의 10퍼센트를
제하는 조치를 포함해 노동조건 악화 정
책을 발표하자, 노동자 1천 명이 도로를
점거하고 경영진 18명을 건물에 가두었
다.

경영진들은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그
들은 노동자들에게 사과하면서 발표한
조치를 철회할 뿐 아니라 임금을 올려 주
겠다고 약속했다!

국영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은 상대적
으로 좀더 완만하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

나 파견근로자를 포함해 각종 비정규직
비율이 빠른 속도로 늘면서 노동자들의
불만도 커졌다.

물론, 투쟁을 벌여 승리한 노동자·농
민은 아직 소수다. 강제 토지 수용 문제
는 대부분 해결되지 않았고, 투쟁으로 임
금 상승을 성취한 경우에도 노동생산성
성장률과 물가 상승 폭보다 낮은 경우가
대다수다.

오늘날 중국 계급투쟁의 가장 근본적
인 문제는 수없이 많은 투쟁이 벌어짐에
도 아직 국가한테서 독립적인 조직이 건
설되지 못한 것이다.

특히 호구제도 때문에 도시 정착이 불
가능한 민공의 경우, 만약 미래에 경기
가 급랭해 대량해고가 발생한다면 도시
에 남을 것인지, 고향에 돌아갈 것인지의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것이다. 독립적
계급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집단
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고향으로 대거
돌아갈 수도 있다.

실제로 2008년 하반기 서방 국가의
경기 급랭으로 중국 성장률이 6퍼센트
대로 추락하고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수
출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했을 때, 연안
수출 공업단지에서 민공 2천5백만 명이
귀향했다.

그러나 2010년 혼다 투쟁이 잘 보여
줬고, 이후 각종 여론조사가 입증했듯이
현 민공의 과반인 신세대 민공은 도시에
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호구상 고향
인 농촌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 그들
중 대다수는 도시에 남을 것이고 일자리
를 놓고 싸울 것이다.

지배자들의 분열

셋째, 중국 자본주의의 모순과 성장을 저
하, 기층 투쟁의 압력으로 현 지배 방식을 유
지할 수 없다는 회의감이 체제 내부 인사로가
지 확산되면서 분열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보시라이 사태는 그것의 극단
적 표현이었다. 중국 공산당 지배자들은
개혁파와 보수파, 혹은 공산주의청년단
과 태자당에 따라 노선이 뚜렷하게 구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쟁점에 따른 분열은

분명히 존재하며 그것이 기층 행동에 힘
을 실어 주기도 한다.

최근에 시진핑은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반부패, 내실 있는 성장, 노동교화소 폐
지 등 온갖 개혁 연사를 남발했다. 이것
은 최소한 당내 일각에서 사법부 독립,
민주화 인사 석방과 같은 개혁을 요구하
는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했다.

<남방주말> 사태도 이런 분위기와 연
관된 것이다. <남방주말>은 폭스콘 노동
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폭로하는 등
진보적 논조로 유명한 주간지지만 엄연
히 광둥성 정부가 소유하는 국유기업 소
속이다.

지난해 11월 시진핑은 중국에서 헌법
정신에 일치하는 통치가 더 강화되어야 한
다고 발언했는데 <남방주말> 편집인과
기자 들은 이것을 강화된 통제에 항의하
는 근거로 활용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당내 보수파
에 맞서 개혁파를 강화하는 것이라 생각
했지만, 더 중요한 효과는 광범한 지지
여론과 행동을 자극한 것이었다.

체제 내 개혁 요구들은 특정 상황에서
는 커다란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 중국은
여전히 정치권력과 경제가 철저히 융합된 권
위주의적인 국가자본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이
런 정치적 개혁 요구가 노동자·농민의 사회적
투쟁들과 결합될 가능성을 높게 만든다.

비슷한 사례로, 2000년대 이집트에서
는 선거 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키파야 투
쟁이나 그것의 자극으로 탄생한 판사들
의 사법부 개혁 투쟁이 전국적 정치적 초
점이 돼 노동자와 기타 민중 투쟁의 발전
을 촉진했다. 이것이 2011년 어떤 결실
을 맺었는지 우리는 이미 아주 잘 알고
있다.

물론, 오늘날 중국 국가는 시장의 영향
력이 확대되면서 과거보다 훨씬 분권화
됐다. 따라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목격
하는 정치 권력과 자본의 결합 문제는 주
로 지방 수준의 문제로 보인다.

덕분에 중앙정부는 전통 시대 황제들
처럼 자신이 지방 권력을 통제하는 청렴
한 중재자인 것처럼 행세해 왔다.

그러나 이런 눈속임은 오래가지 못할
수 있다. 지난해 <뉴욕타임스>와 <블룸
버그 통신> 보도가 잘 보여 줬듯이, 원자
바오와 시진핑 가족들을 포함해 중앙정
부 핵심 인사와 그 일가 친척들이 중국
자본주의의 알짜배기 기업들(국영과 민
간 모두)을 통제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이 보도에 대단히 민감하
게 반응한 것은 그것이 가처를 정치적 폭
발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시진핑이 지
금 반부패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러나 최고위 인사와 그 가족들
이 엄청난 이익을 얻는 현 상황에서 반부
패는 결코 일관될 수 없다.

이런 커다란 도전들을 잘 해결하지 못
하면 시진핑 정부가 마지막 공산당 정부
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공산당 내부에서
도 나오고 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집단이 아니라 중국
노동계급과 민중이 그 과정에서 주도권
을 행사하는 것이다.

김용욱



성장하고 있는 노동자 투쟁 경영진을 감금하고 싸워서 노동조건 후퇴를 막아낸 상하이신메이전자 노동자들.

사진 출처: <http://www.mingpao.com>

세계경제가 회복됐다고?

낮은 수익성 때문에 봄은 아직 멀었다

이정구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최근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전망이 난무하고 있다. 이런 낙관적 전망은 이번 세계경제 위기의 진앙지인 미국에서 몇 가지 경제지표들의 호전이 근거가 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3.1퍼센트였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중국의 4분기 경제성장률이 7.9퍼센트를 기록해 3분기의 7.4퍼센트에서 반등했다는 점도 거론된다. 더 나아가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유로존의 남유럽 국가들(이른바 PIIGS)에서 자본 순유입이 관찰됐다는 점도 이런 낙관적 전망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그러나 제비 한 마리가 봄을 몰고 오지는 않는 법이다. 2012년의 세계경제는 미국·유로존·일본의 경제 위기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중국·브라질·한국 같은 신흥공업국들의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 줬는데, 올해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재현될 공간이 크다.

세계은행도 2013년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경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을 뿐 아니라(3.0퍼센트에서 2.4퍼센트로), 미국 경제와 일본 경제는 지난해보다 더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유로존은 지난해(-0.4퍼센트)에 이어 올해도 마이너스 성장(-0.1퍼센트)을 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2012년 개도국 성장률은 5.1퍼센트로, 지난 1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주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경제가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각국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 덕분이다. 하지만 이런 **경기부양책은 자본의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효과를 내면서 자산 거품을 다시 부추길 수 있다.**

유동성 함정

미국 경제는 지난해 3분기의 깜짝 성장(3.1퍼센트) 이후 4분기에는 다시 -0.1퍼센트로 후퇴했다. 미국의 민간투자는 이번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1996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미국 정부가 세 차례 양적완화를 통해 통화를 공급하고 금리를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췄음에도 기업의 투자는 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업률도 경제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의 9퍼센트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7퍼센트 대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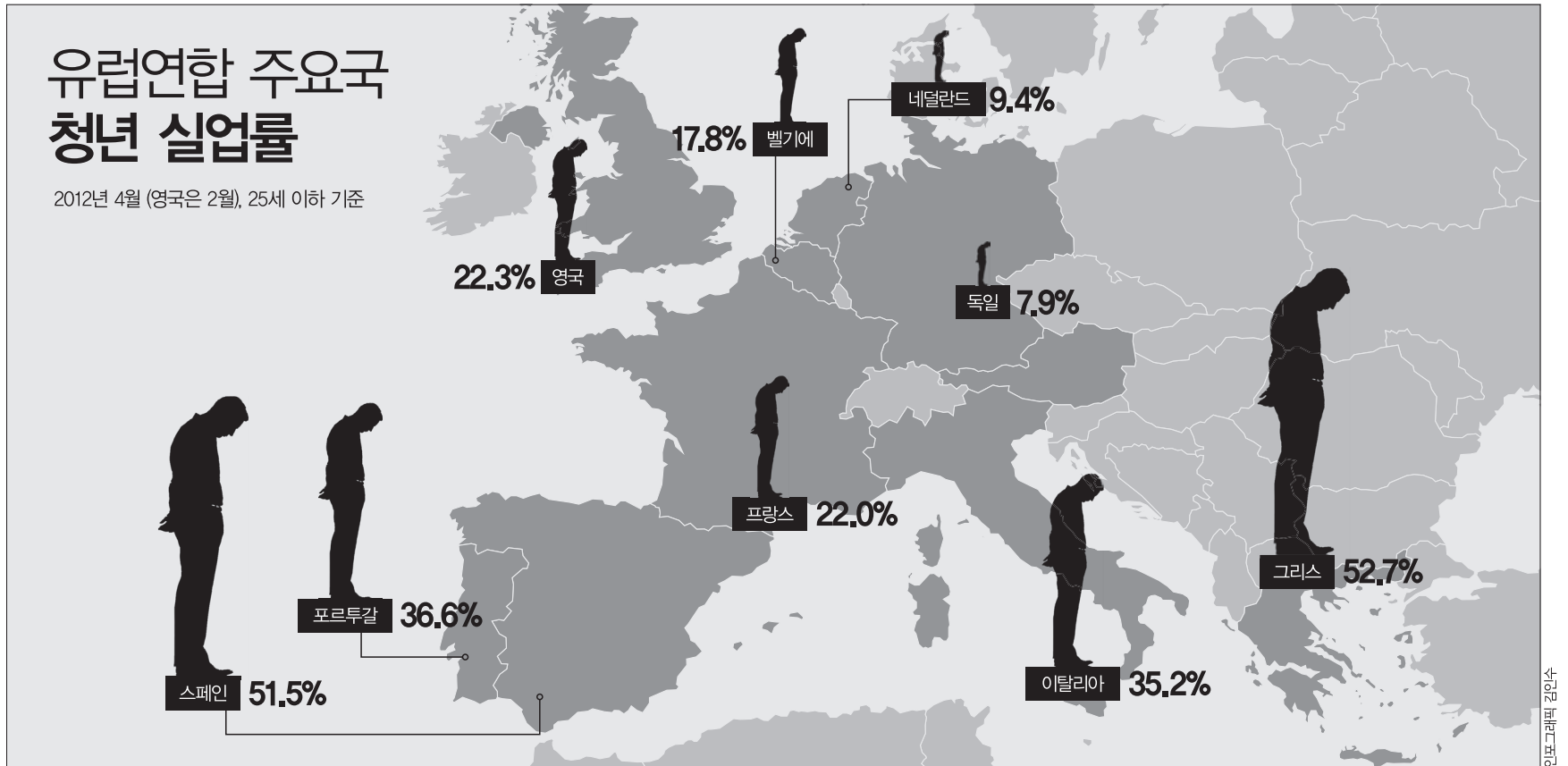
미국 경제는 양적완화로 인해 풍부해진 유동성이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원자재 매점매석 같은 자산 거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실제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주식시장이 호전된 것이 아니라 양적완화로 자산 인플레이션이 형성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최대 채권펀드인 핼프코의 빌 그로스는 신용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예상치 못한 붕괴를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 경제는 재정절벽 협상이나 3월 1일 만료 예정인 ‘시퀘스터’(자동적인 예산삭감) 같은 사건이 가져다줄 파열음과 긴장보다는, 수익성의 정체로 인한 무기력한 ‘회복’이 더 큰 문제다. 올해 미국 경제는 유로존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지만 세계경제의 동력으로 작용하기는커녕 여전히 정체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유럽연합 주요국 청년 실업률

2012년 4월 (영국은 2월), 25세 이하 기준



가시밭길의 유로존

유로존 경제는 회복되고 있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위기가 그 중심부로 확대되고 있는 형국이다. 독일 중앙은행(분데스뱅크)은 2013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6퍼센트에서 0.4퍼센트로 낮췄고,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올해 성장률이 -0.5퍼센트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로존 국가들 중 상대적으로 견실했던 독일과 네덜란드의 실물경제가 침체하고 있다. 또한 유럽중앙은행의 무제한적인 국제 매입과 저금리 정책 때문에 자본이 몰리고 있는 독일에서는 부동산 거품의 우려도 등장하고 있다.

친자본주의적인 신문인 〈파이낸셜 타임스〉의 유럽 경제 전문 칼럼니스트인 볼프강 뮌차우는 유로존 상황이 ‘좀비 은행’과 ‘거시경제 조정’이라는 두 가지 문제점 때문에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EU에서 출범할 ‘단일 정리 체제’(단일 기관이 동일한 기준으로 청산이나 회생 등 부실은행 정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체제)가 “채무국의 은행 파산으로부터 채권국 납세자를 보호하는 데 그칠 뿐 부실은행 정리 속도를 높이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아가 그는 “현재 유로존 은행들에 부족한 자금은 5천억에서 1조 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손실을 좀더 숨씨

있게 감췄을 뿐 독일과 프랑스 은행들도 문제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유로존 경제는 그리스보다 더 거대한 스페인의 국가 부도 위기와 씨름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제결제은행(BIS) 조사를 보면, 스페인 은행들이 유럽 은행들에 갚아야 할 자금은 4천3백72억 유로(6백50조 원)로, 그리스의 6급절에 이른다.

유럽 24개국에 대한 스페인의 채무액은 1조 9억 달러에 이른다. 이 때문에 지난해 6월 스페인이 확보한 1천억 유로의 국제금융으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스페인 국가와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채무액이 크다는 점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스페인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스페인 경제성장률은 -1.7퍼센트였다. 스페인 정부가 추진하는 2백70억 유로의 재정감축안에다 라호이 총리가 새롭게 1백억 유로의 새 긴축안을 내놓았다.

이런 노력에도 스페인의 재정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고강도 내핍정책이 경기를 위축시키고 세금 수입을 줄이기 때문이다. 스페인의 실업률은 24퍼센트로 유럽연합 국가들 중 최고이고, 청년 실업률은 50퍼센트에 이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라호이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모금 의혹 등의 사건에도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치솟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스페인 경제

상황은 올해 유로존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

이웃 거지 만들기 정책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각국 지배자들의 정책 도구는 재정정책, 통화정책, 환율정책이 있다. 미국과 유로존 국가들이 저금리와 통화량 증대 정책들을 추구하고 있다면, 일본 아베 정권은 이에 더해 환율정책까지 추진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10조 엔의 재정을 투입하는 경기부양책에다 일본판 양적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덕분에 지난 2개월 동안 엔화는 달러화와 유로화에 견줘 각각 20퍼센트, 25퍼센트 평가절하 됐고, 이 덕분에 수출 기업의 수익성이 급속히 개선되고 있다.

사실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일본 자본주의로서는 환율 조정을 통한 수출경쟁력 회복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나서 일본의 엔화는 실질가치로 봤을 때(상대적 인플레이션을 고려했을 때) 30~40퍼센트나 평가절하된 반면 영국 파운드화는 25퍼센트 하락했고, 유로화는 10~15퍼센트 하락했다.

이런 환율 변화 때문에 일본의 경상수지는 2009년 4조 엔 흑자에서 2011년 1조 5천8백억 엔 적자로 급락했다. 경제성장률도 2009년과 2011년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아베 총리의 경기부양책과 엔화 평가절하를 통한 수출경쟁력 회복 시도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일본 경제의 정체는 이미 20년 넘게 지속돼 오고 있는데, 금리 인하와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책 모두 효과가 없었다.

다른 한편, 엔화 평가절하는 이미 독일과 프랑스 등에게서 견제와 반발을 사고 있다. 프랑스 대통령 올랑드는 “유로존도 환율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 환율에 종속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프랑스 수출 기업의 걱정을 반영한 것이다.

1929년 대공황 때도 영국을 선두로 미국, 일본, 독일 등이 금본위제에서 이탈해 자국 통화 가치를 낮췄지만 이런 조치가 공황을 끝내지는 못했다.

〈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는 일본 경제가 디스플레이와 경기부양책이나 통화팽창의 부재 때문에 침체돼 있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일말의 진실이 있는데, 바로 일본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과도하게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과도한 저축’은 일본 자본주의의 낮은 수익성을 반영하고 있다.

내핍과 경기부양의 탱고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세계경제의 기판차로 불리던 중국이 이제는 경착륙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7.8퍼센트를 기록해 13년 만에 8퍼센트를 밑돌았다.

중국 지배자들은 고도성장과 고용을 위해 유지했던 8퍼센트 정책을 지난해 말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사실상 포기했다.

미국과 유로존 경제 위기로 인해 중국산 제품의 판매가 급감하고 이것이 중국 내 민간투자의 급속한 위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지배자들은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과 함께 국유기업은행을 통한 대출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은 부동산 거품, 투자의 국가부문 비중 증대,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 국유기업은행의 잠재적 부실 증대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중국도 미국이나 유로존 국가와 마찬가지로 수익성 악화라는 공통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런 수익성 악화가 투자의 위축을 낳고 이것이 경제 회복을 더욱 힘들게 만든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 지배자들은 한편으로 내핍(임금, 연금, 복지 등의 각종 삭감)을 추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수익성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에게 유리한 경기부양책을 펼친다.

하지만 이것으로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아베의 사례처럼 다른 국가의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환율정책을 펼 수도 있다. 이것은 이른바 ‘환율 전쟁’을 초래할 것이다.

경제적 경쟁과 군사적 경쟁은 경제 위기 때 각국 지배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지다. 2013년은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지부진하면서 경제적 경쟁과 국지적으로는 군사적 경쟁이 점점 더 가열돼 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각국 지배자들이 추진하고 있는 임금·복지 삭감 같은 내핍 정책 때문에 대중의 삶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사진 출처 SpaceShoe (플리커)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금융 투자자가 투자한 상품이 부도가 날 것을 대비해 들어 두는 파생보험상품. CDS 프리미엄이 높을수록 부도 위험이 높다는 뜻이다.

소식·보고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2월 27일(수)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를 두 번 죽인 조남호와 박근혜

“명절에 이렇게 젊은 남편의 제를 지 내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최강서 열사의 부인이 트위터에 남긴 말이다.

한진중공업에서 최강서 열사가 돌아 가신 지 58일(2월 16일 현재)이 넘었다. 최강서 열사는 노조탄압용 1백58억 원 손배배상과 정리해고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3년간 꾸준히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을 괴롭혀 온 회장 조남호가 최강서 열사를 죽인 것이다.

그러나 한진중공업 사측은 뻔뻔하게도 최강서 열사가 자살한 것이 생활고로 인한 개인적 자살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하지만, 정리해고로 그를 생활고에 허덕이게 만든 것도 한진중공업 사측이다.

1월 30일, 분노한 사람들은 사측에 항의해 집회를 하다 경찰에 몰려 영도조선소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럼에도 사측은 여태껏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며 오히려 경찰을 앞세워 음식물과 생필품 반입을 막고, 집회를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사측과 경찰뿐 아니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도 유가족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

지난 8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유가족·노조와 협의된 바가 없었는데도, 한진중공업 노사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2009년 해고 때부터 경찰을 동원해 온갖 탄압을 일삼고 조남호를 비호해 주던



“손배가압류 철회로 열사의 한을 풀자” 2월 2일 영도조선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

새누리당이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거짓 말을 하더니 정말로 뻔뻔하기 짝이 없다.

피죄죄

민주당도 피죄죄하기는 마찬가지다. 한진중공업 이용대 조합원은 “박근혜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민주당을 지지해 줬는데, 조남호에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건 생각도 않고 이런 짓을 했다”고 비판했다.

최강서 열사는 정리해고와 노조탄압용 손배가압류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남호는 지금 당장 1백58억 원 손배가압류를 철회하고, 최강서 열사 유가족에 사과해야 한다. 지금 한진중공업 앞에서 투쟁하는 이들에게 지지를 보내며, 정리해고를 일삼는 조남호와 폭력으로 대응하는 이명박근혜에 맞서 싸우자.

박준희

“이것은 정의를 위한 싸움입니다”

조선소 안에서 농성 중인 한진중공업 이용대 조합원(사진을 전화 인터뷰했다.

“이곳은 매우 좁습니다. 바닷바람이 정말 많이 불니다. 비날로 천막을 만들고, 스티로폼을 깔고 자면서 버티고 있지만, 그래도 너무 추위 온몸에서 한기가 돌고 감기 걸린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경찰이 음식물 반입을 막아 처음에는 라면만 먹고 1주일을 버텼습니다. 회사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5명에게 체포영장이 떨어졌고, 조선소에서 나가는

사람들을 무조건 연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항복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안실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싸울 생각입니다. 정리해고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우리의 자식들에게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최강서 열사가 왜 죽었는지를 다들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싸움은 사회 정의를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하는 것입니다.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조원진

학교비정규직

박근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올해도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대량해고가 자행되고 있다. 이에 맞서 지역별로 농성, 1인 시위 등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매년 비정규직 노동자 1만여 명이 해고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아래 글은 2월 13일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 해결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발표된 노동자들의 절절한 해고 사례다.

“온갖 무시와 모욕을 참으며 일해 왔는데 해고라뇨”

저는 강남 구룡중학교에서 일하는 조리종사원입니다. 저희 학교는 현재 7명이 일하고 있는데, 이번에 학생 수가 13명 줄어서 저를 해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배치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7명이 하던 일 중 밥, 반찬 조금 덜 한다고 일이 그렇게 많이 편해지지 않는다는 건 잘 압니다. 지금도 힘든데 7명이 하던 일을 6명이 하게 되면, 그 일을 어떻게 다 할지 걱정됩니다.

해고당하고 노조를 통해 교장을 만나러 갔더니, 행정실장과 교장은 서울 시교육청에 가서 교섭을 하라고 하더군요. 아니 제가 교육청에서 잘했습니까? 해고는 교장이 하고, 책임은 교육청이 져야 한다는 겁니까?

지난 1년간 정말 꼭 참고 일했습니다. 초여름에는 전기세 아낀다고 조리실에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아 온 몸을 땀

으로 목욕하고, 한겨울에는 동상에 걸리진 말건 통풍이 중요하다며 문을 활짝 열어놓기도 하고, 1주일에 3~4번씩 전판에서 내뿜는 뜨거운 열기 속에서 조리를 하는 건 그래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욕박지르는 영양사, 50~60대 우리 조리원들이 영양사한테 밥을 떠다 바치는 것, “이봐요, 아줌마”로 불리며 무시당하는 것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리원을 모두 도둑놈 취급하며 도둑질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쓸 땐,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이런 걸 다 참아 왔는데, 해고라뇨?

전 제가 해고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아이들에게 맛있는 밥을 해 주고 싶습니다.

이주니 서울 구룡중학교 조리원



이영진

박근혜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 지켜라 지난해 11월 9일 역사상 첫 파업에 나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런 투쟁이 매년 반복되는 해고와 고용 불안을 끝장낼 힘이다.

“방과후학교 내실화한다면서 집단 해고를 자행했습니다”

부산의 방과후 코디네이터는 2009년 도입된 이후부터 단 한 번도 임금(주 20시간은 월 50만 원, 주 30시간은 월 75만 원)이 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시급은 약 4천1백 원으로 2012년 최저임금(4천5백80원)에도 못 미칩니다.

우리는 지난 4년간 임금이 동결됐던 것을 비롯해 고용불안정 등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교육청은 시급을 대폭 인상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현저하게 줄여버려 오히려 임금이 감소했습니다. 주 20~30시간 일하다가 ‘주 12시간’으로 그동안 하던 일을 똑같이 해내야 하다 보니 노동강도도 높아졌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이라, 근로기준법 보호조차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또한 부산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 내실화’를 위한 학교장단 연수’에서 4백 30여 명의 모든 방과후 코디네이터에게 11월 안으로 해고 통보를 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교육기관이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였

습니다.

11월 중순 부산시교육청의 방과후 코디네이터 집단해고 지침과 일방적 노동조건 약화에 맞서 부산 방과후 코디네이터 조합원들은 12월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부산의 방과후 코디 조합원들은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해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왔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예산이 없어 초과근로 수당을 주지 못한다는 학교의 말에 남은 일을 집에 들고 가서라도 해왔던 것이 방과후 코디들입니다. 전국에서 부산이 방과후 학교가 가장 활성화 될 수 있었던 이유에는 바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제 할 일을 해 온 방과후 코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 내실화’를 2013년도 목표로 걸고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이 진심으로 방과후 학교가 활성화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원한다면, ‘주 15시간 미만 채용 지침’을 철회해야 합니다. 또한 복직을 원하는 조합원들을 학교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조의진 부산 인력초등학교 방과후 코디네이터

비정규교수노조

통쾌한 파업 승리로 임금 인상 등을 따내다

박근혜 당선 직후 시작된 5개 대학의 비정규교수노조 파업이 통쾌한 승리로 끝났다.

조선대·영남대·부산대·전남대·경북대 파업은 대학 비정규 교수들이 간절히 바라는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모두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뤄냈다.

예를 들어 경북대 분회는 다른 국립대 시간강사료보다 15~20퍼센트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을 쟁취했다. 폐강기준 완화, 캠퍼스 간 교통비 지원, 비정규 교수실 추가 마련, 논문 지원비 등을 쟁취한 것도 중요한 성과다.

파업 농성이 조합원과 비조합원들의 지지를 모으는 초점 구실을 했다. 또한 학생들의 성적 입력을 거부하는 파업 전술도 매우 효과적이었다. 이 전술은 학사행정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해 학교 당국을 결정적으로 몰려서게 했다.

가장 빨리 승리를 얻어낸 영남대는 학

생들의 지지가 결정적 구실을 했다.

영남대 총학생회는 처음에 노조에 항의하러 왔다. 그러나 반값등록금 운동을 지지한 영남대 분회장 등 노조원들에게 설득돼 그 뒤 대학본부에 찾아가 강력히 항의했다.

학생들과 강사들의 연대가 확산될 것을 두려워한 학교 당국은 서둘러 타결에 나섰다.

단기 인생

‘15주 단기 인생’이나 다름없는 심각한 고용불안, 강의 준비부터 성적 입력에 이르는 시간을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임금 등 대학의 비정규 교수들의 노동조건은 그야말로 절망적이다. 강의 폐쇄도 대학 당국 제멋대로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는커녕 비정규 교수들을 대량해고해 대학을 ‘콩나물 교실’로 만들려 한다. 시간강사

대량해고법인 강사법이 1년 유예됐음에도 이미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비정규 교수들이 강의를 얻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전임 교원 인력을 늘리지 않은 채 개인당 책임시수를 늘린 결과다. 그러나 전문 연구분야를 고려하지 않고 초과 강의료만 조금 더 주면서 전임 교원들의 수업시수를 늘리면 수업의 질이 하락하기 쉽다.

그래서 5개 대학 비정규 교수들의 파업 승리 소식은 전국의 비정규 교수들 귀를 번쩍 뜨이게 하는 반가운 소식이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시장주의적 대학 구조조정에 반대, 강사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대학노조·교수노조 등 진보단체들과 연대해 투쟁하려 한다.

이번 파업 승리는 교육을 돈벌이에 종속시키는 정부와 대학 당국에 맞서는 운동을 전진시키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김어진 경성대 연구교수

골든브릿지투자증권

3백 일 넘게 푼푼 뭉쳐 싸우는 노동자들

지난해 4월 23일 전면 파업에 돌입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노동자들이 3백 일 넘게 굳건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사측은 경기 악화에 대응해 노조 탄압과 단체협약 개악 등으로 노동자들을 옥죄었다. 이미 금융권 일각에서 시작된 구조조정 의 일환인 셈이다.

실제로 사측은 해고를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단협 개악안을 들고 나왔고,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원격지 부당정보와 징계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다. 이 과정에서 노조파괴 전문집단 ‘창조컨설팅’ 출신의 노무사를 인사팀 과장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심지어 사측은 조합원들을 미행하고 ‘도촬’을 하는 등 불법적인 사찰까지 벌였다. 지난해 여름에는 용역을 동원해 작업장에 출입하려는 조합원들을 가로막고 폭력을 행사했는데, 용역 중 일부는 ‘글러스 너클’이라는 불법 무기로 조합원들을 위협했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사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과거 경영 위기에 처했을 때, 노동자들이 회생을 감내해 살려 놓은 회사다. 2005년 7월 증권노조와 골든브릿지증권지부는 당시 대주주였던 영국계 투기자본인 BIH펀드에 맞서, 현 골든브릿지투자증권 회장 이상준과 약정서를 체결하며 회사 인수를 도왔다. 이때 노동자들은 커다란 희생을 치러야 했다.

당시 이상준은 자신이 ‘과거 노동운동에 몸담았다’면서 타 경영인들과는 다를 거라고 장담했다. 해고를 안 하고, 정년을 연장해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도 했다.



“포기하지 않고 싸우면 승리한다는 희망을 만들겠다.”

이렇게 탄생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노동자들의 노력으로 인수 첫 해부터 흑자를 기록했다. 인수 당시 7백38억 원에 지나지 않았던 자기자본은 1천7백23억 원으로 늘었다.

그런데도 배은망덕한 이상준과 사측은 2011년부터 노동자들을 공격하며 탄압의 고삐를 당겼다.

특히, 사측은 지금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파업 파괴 행위도 일삼고 있다. 법원이 이를 불법이라고 판결했는데도 막무가내로 말이다.

불법적인 대체인력 투입이 계속되고 있어 파업 효과가 커지진 못하고 있지만, 10개월째 임금도 못 받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흔들림 없이 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투쟁 3백 일 집회에서 노동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21살 여성 조합원부터 파업 현장에서 정년을 맞은 50대 조합원까지 힘겹지만 푼푼 뭉쳐 싸우고 있다. 다음 정권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희망이 되기 위해 반드시 승리하겠다.”

노영민

원광대

등록금 ‘거의 동결’에 맞선 투쟁이 준비되고 있다

원광대학교 당국은 올해 등록금을 겨우 0.6퍼센트 인하하겠다고 통보했다. 학생 1인당 등록금을 평균 2만 1천 원 인하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등록금 동결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학생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원광대는 학교 당국의 방만한 대학 운영으로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은 적이 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학생들에게 제대로 투자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학교 측은 재정 상황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는 완전한 거짓말이다. 원광대 당국이 지난해에 쓰지 않고 넘긴 이월금만도 1백70억 원으로 예측된다. 또 학교 법인은 법적으로 정해진 재단전입금을 절반도 부담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원광학원이 1백96억 원 넘는 이월·적립금을 쌓아두고도 재단이 부담해야 할 사학 연금 77억 원을 원광대에 떠넘긴 것이 드러났다. 77억 원이면 원광대 학생들 1인당 수십만 원의 등록금 인하가 가능한 돈이다!

학교 당국이 적립금 불리기를 그만두고 재단전입금을 확충하면 등록금 대폭 인하가 충분히 가능하다.

박영준 원광대학교 학생

그래서 학생들은 제대로 된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올해 1월 말에 열린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서 학생 측 위원들은 학교 측의 ‘등록금 절감 인하안’에 반대 표를 던졌다. 그러나 찬반 동수면 학교 측의 안이 통과되는 비민주적 규정 때문에, 학교 측은 0.6퍼센트 인하를 밀어붙였다. 물론 애초부터 학생들에게 불리했던 등심위에서 차라리 표결에 참가하지 않는 게 더 나았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총학생회는 확대운영위원회를 통해 등심위 결과를 받아 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개강하면 학생총회를 열어 등록금 대폭 인하를 요구할 것을 의결했다.

올 1월에 학교 측은 ‘의학계열 4.7퍼센트 인상, 비의학계열 소폭 인하’라는 기만적인 차등 인상안을 제시하며 학생들을 이간질하려 했다. 그러나 방학 중에도 학생 40여 명이 저항에 나서자 학교 당국은 급세 차등 인상 계획을 철회했다.

개강을 하면 행동을 더 확대해야 한다. 학생들이 높은 등록금으로 알바와 휴학을 전전하고 빚더미에 쌓여 졸업하는 현실에서, 학교 당국은 등록금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

독자토론광장

2월 27일(수)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눈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라도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실지 못한 독자편자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습니다.

반값등록금 집회 참가 무혐의 통보를 받고 기쁘면서도 분노한 까닭

나는 지난해 10월 10일 수요일 밤, 체포영장을 들고 집으로 들어닥친 경찰에게 영문도 모른 채 연행됐다. 경찰서에 가서 보니 2011년 6월 4일 열린 반값등록금 집회와 6월 7일 열린 연행자 규탄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나를 체포한 것이었다. 난 다음날 아침까지 유치장에서 감금돼 있어야만 했다.

경찰이 나를 연행하러 온 때는 반값등록금 집회가 열린 지 1년 반,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1년이 지나서였다. 그리고 바로 대선을 코 앞에 둔 시기였다. 이 시점에서 경찰이 날 연행한 것은 진보진영, 그중에서도 반값등록금 운동을 주도했던 현대련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 뻔했다.

그들은 날 연행해서 내가 기죽고 조사에 응하길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반값등록금 집회에 참가한 것은 애초부터 죄가 될 수 없었고, 나는 이런 부당한 조사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반값등록금은 이명박의 공

약이었다. 공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한 것이 죄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경찰은,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찍은 사진 중에 모자를 쓰고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 나와 닮았다는 것을 유일한 증거로 제시했다. 마구잡이로 사진을 찍고 얼굴이 비슷하면 일단 잡고 보자는 식이었다. 내가 묵비권을 행사하자 경찰은 나에게서 증거를 더 얻는 것을 포기했다.

심지어 경찰은 얼마 뒤 어머니를 찾아가 ‘이 사진에 찍힌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 맞는지’ 물었다. 나중에 어머니께 전화를 받고서야 그 사실을 알았는데, 어머니는 차분한 목소리로 “사진을 보고 내가 아니어서 아니라고 말했다”고 하셨다.

그리고 경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다. “애가 쌍용자동차 때도 무고하게 잡혀가서 재판까지 했는데, 검찰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니 당연히 경찰에게 좋은 감정을 갖겠다. 요즘

이렇게 사회문제에 관심 가지고 활동하는 애가 어디 있느냐.” 경찰이 아들을 범법자 취급을 하는 것에 상처를 받으셨을 텐데, 날 나무라지 않고 경찰에게 한 마디까지 해주셨다는 어머니께 난 정말 감사했다.

결국 아무런 증거를 얻지 못한 검찰은 1월 30일 내게 아무런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통지서를 보냈다. 한편으로 기뻐지만, 한편으로 분노했다. 반값등록금을 요구했다는 것을 혐의 취급하는 것부터가 분노스러웠고, 증거도 없는 사건으로 날 강제 연행해서 유치장에 감금해 놓고는, ‘혐의가 없었다는 통지서’ 한 장 보내는 것으로 끝내는 것도 분노스러웠다.

등록금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빚을 지고, 심지어 자살을 하기도 한다. 반값등록금은 이 고통을 덜어낼 최소한의 요구다. 박근혜 정권에서 반값등록금이 가능하겠나고? 난 내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김무석 건국대학교 학생

‘평화’ 운운하며 확산탄 양산하는 위선

박근혜는 북한 핵실험이 “한반도와 국제평화에 대한 중대 위협”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압박·제재에 협력해 핵 위기를 심화시켜 온 새누리당과 박근혜는 평화를 말할 자격이 없다.

대북 정책만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에 발효된 확산탄금지협약에 참가하지 않고 있다.

확산탄(집속탄)은 한 개의 폭탄 속에 또 다른 폭탄이 수십 개에서 수천 개까지 들어가 있는 무기로, 다수의 인명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비인도적 무기다. 무차별적으로 민간인을 대량살상할 위험이 클 뿐 아니라, 다수의 소형 폭탄이 불발탄으로 남아 지뢰처럼 터지므로 인근 지역이 황폐화된다.

확산탄은 제2차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소련군이 처음으로 사용했으나, 1970년대 들어 미국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을 침공하면서 더 본격적으로 사용됐다.

2000년대에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침략과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략 등 제국주의적 침략 전쟁에 적극 이용돼 진정한 ‘대량살상무기’로 불리기도 했다.

국내 유명 기업인 한화와 풍산은 확산탄 대량 생산 기업이다. 2011년 국제확산탄금지운동 단체들이 선정한 세계 8대 확산탄 생산 기업 명단인 ‘수치의 전당’(Hall of Shame)에 한화는 2위, 풍산은 5위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국민연금공단까지 나서 기업들에 국민연금 기금을 자금으로 투자하고 있다. 심지어 국민연금공단의 각 기업별 지분은 지난 1~2년 사이에 갑절 가까이 늘었다.

사회 공공성과 복지를 위해 국민들이 낸 돈이 살상무기 생산에 쓰이고 있는 셈이다.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의 불의한 투자를 철회하고, 확산탄 생산을 금지해야 한다.

조익진

감옥에서 온 새해 인사

〈레프트21〉 동지들에게!
입춘이 다가오니 어김없이 봄을 재촉하는 비가 촉촉히 내립니다. 우리 민중의 봄은 언제나 오르는지... 만인의 웃음꽃 피어날 그 봄을 위해 변함없는 새 세상 개척의 길을 걷는 〈레프트21〉 동지들에게 뜨거운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레프트21〉을 통해 전 세계 진보진영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 듣고 늘 큰 힘을 받으면서도 고마운 마음 전하는 편지 한 장 보내지 못해 미안합니다.

늦었지만 새해 〈레프트21〉 모든 성원들에게 건강과 만복이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낡은 것이 새 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민중 승리의 새시대를 안아 올 결의로 옥중에서나마 동지들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2013. 2. 4. 서울구치소에서 이창기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자주민보) 대표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노동자연대다함께 포럼에 초대합니다

주최 | 노동자연대다함께 www.alltogether.or.kr

* 웹사이트에 포럼 일정을 수시로 업데이트합니다. / * 참가비는 장소 대여 등에 사용됩니다.

경기지회

위기의 한반도

— 진보적 관점에서 본 북한 3차 핵실험의 배경과 전망

연사 : 김여진(반전평화연대(준)공동간사, 경성대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일시 : 2월 21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민들레영도 수원점수원역 지하상가 3번 출구

참가비 : 6천 원(장소대여비로 사용되며, 행과 음료가 제공됩니다)

문의 : 010-8700-4647

서울 중북부지구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본 북한 핵실험과 위기의 동아시아

연사 : 한규환(노동자연대다함께 활동가)

일시 : 2월 21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한성대 예류센터 804호(해화학 4번 출구 도보 3분 거리, CGV 옆 건물)

참가비 : 2천 원

문의 : 010-9820-5698

서울 서부지구

북한 핵 실험과 깊어지는 동아시아 불안정

연사 : 김영성(〈레프트21〉 기자)

일시 : 2월 21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한국여성노동자회 지하교육장 (공간 여성과 일, 홍대입구역 1번 출구)

참가비 : 3천 원(학생 2천 원)

문의 : 010-7725-9823, facebook.com/atlgwestforum

부산지회

세계경제 위기, 동아시아 긴장 고조, 사회양극화 심화 — 박근혜의 앞날과 진보의 과제

연사 : 허수영(노동자연대다함께 활동가)

일시 : 2월 21일 (목) 오후 7시

장소 : 토즈 부산대점(부산대 앞 부산은행 사거리)

참가비 : 3천 원(참가비는 대관료로 쓰입니다)

문의 : 010-6688-4761

울산지회

박근혜의 ‘맞춤형 복지’?

— 진정한 복지 확대는 어떻게 가능한가?

연사 :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레프트21〉 칼럼니스트)

일시 : 2월 28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울산시민연대 교육관

참가비 : 3천 원(학생 2천 원)

문의 : 010-5004-1880

서울 남부지구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본 북한 핵실험과 위기의 동아시아

연사 : 김어진

(반전평화연대(준)공동간사, 경성대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일시 : 2월 28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L&B부동산경제연구소 강의장

(교대역 13번 출구 200m 농부의 아들 2층)

장소 : 4천 원(학생 3천 원)

문의 : 010-9401-1370

서울 동부지구

박근혜 정부의 앞날과 진보의 과제

연사 : 김문성(〈레프트21〉 기자)

일시 : 2월 28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건대입구역 6번 출구) 3층 2강의실

참가비 : 3천5백 원(학생 2천5백 원)

문의 : 010-9453-5318, 010-5731-7299

제국주의 압박이 불러낸 북한 3차 핵실험

사태 악화 낚을 강경 대응 반대한다

김영익

2월 12일 북한 당국이 결국 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핵무장 능력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이번 핵실험에 “소형화·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실험은 반제국주의나 사회주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 인민의 삶을 희생하며 이뤄지는 북한의 핵개발은 이 지역의 긴장만 더 격화시킨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핵에 반대하는 사회주의자로서 북한 핵실험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의 3차 핵실험은 한·미·일의 대북 압박이 낳은 예정된 결과였다**는 점을 분명히 봐야 한다. 지난달 유엔 안보리는 광명성 3호 발사를 빌미로 대북 제재 결의를 통과시켰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에 의해 위성발사 권리가 박탈당한 유일한 국가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 핵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라고 올려댔다. 2월 초 한국과 미국은 동해상에서 이지스함과 핵잠수함을 동원해 북한 전역을 공격권에 두는 핵 공격 연습까지 했다.

이런 움직임들이 북한에 큰 압력이 됐다.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은 미국이 “[북한에] 사실상 핵실험을 하라고 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한다.

지금, 미국과 그 동맹국의 지배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고 있다.

이중기준

그러나 이들은 북한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핵전력을 갖고 있으며, 실전에서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국가다. 오바마 정부도 지금까지 최소 6번 이상의 핵실험을 진행했다.

미국 지배자들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의회 비준도 거부한 바 있다.

중국도 지난해 6~7월 다핵탄두미사일 발사와 신행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잇달아 실시했다.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탄두 수천 기를 제조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북한의 은하 3호와 하나도 다를 게 없는 남한의 나로호는 조금도 문제 삼지 않았다. 게다가 유엔 대북 제재가 통과된 후 미국, 일본, 중국은 1월 27일 나란히 로켓과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런 지경이니 북한 지배자들이 강대국들을 향해 “이중기준의 극치”라며 반발할 만하다.

‘주민이 굶주리는데 핵·미사일 개발에 돈을 쓴다’고 북한을 비난하는 것도 우습다. 전 세계의 빈곤과 기아를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돈을 군사비로 쓰고 있는

것은 미국 제국주의다.

게다가 북한의 핵과 로켓 능력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비교하면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북한의 핵무기는] 아직은 초보적 단계”(지그프리드 헤커 박사)에 있다.

무엇보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북한이 핵과 로켓에 집착하도록 채찍질해 온 장본인들이다. 2000년대 초반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이란과 더불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심지어 핵 선제 공격 대상에 올렸다.

2006년 북한의 첫 번째 핵실험은 2005년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라고 비난하고 강력한 금융 제재를 실시한 데 북한이 반발하면서 일어난 것이었다.

부시에 이어 집권한 오바마 행정부도 북한의 대화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며, “전략적 인내”라는 기치 아래 갖가지 제재와 압박을 가해 왔다.

미국이 낳은 ‘괴물’

즉, 북한의 핵과 로켓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압박이 낳은 ‘괴물’인 것이다.

미국 지배자들이 북한을 ‘악마화’한 이유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전략과 맞닿아 있다. 북한이라는 ‘골칫거리’를 힘으로 다스림으로써 동아시아 국가들한테 자신의 패권을 각인시키려 한 것이다. 또한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동맹국들을 단단히 묶어둘 수 있었다.

지금 한·미·일 지배자들은 더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한 핵실험에 대처하겠다고 한다. 여기에는 포괄적인 금융 제재 조처, 선박 검색 강화, 해상 봉쇄 시도,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대북 식량 지원 차단 등이 거론된다.

심지어 북한 정권의 붕괴와 교체를 지원하자는 얘기도 흘러 나온다.

이는 더 강력한 군사적 조치와도 연결될 게 뻔하다. 우선 곧 실시될 한미 연합 키리졸브 훈련·독수리 연습에서 어떤 우발적 상황이 벌어질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미국은 이번 핵실험을 미사일방어(MD) 체제를 강화할 절호의 기회로 여긴다. MD 체제에 한국이 공식적으로 참가하라고 압력을 가할 것이며, 나아가 한·미·일 삼각 동맹을 구축·강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지난해 중단된 한일 군사협정 논의를 다시 중재할 기미도 있다.

그러나 이런 강경 대응은 이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키울 뿐이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로켓 발사 등으로 대응할 우려도 크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상황이 주변 국가들의 핵무장 야욕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며,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중단한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하고 우라늄 농축 시설



핵실험 직후 공개된 한국의 함대지 순항미사일. 한·미·일 지배자들이 북한 핵실험을 핑계로 군비증강과 군사동맹 강화를 꾀하는 게 진짜 문제다.

도 신·증설하기로 했다.

이런 도미노 현상은 남한과 대만 같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줄 텐데, 이는 심지어 미국 지배자들에게조차도 우려스러운 것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일정한 대치 국면이 끝나고, 북미 간 대화가 시작될 수도 있다. 미국 지배자들도 ‘위기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로켓 발사 후에도 북미 간 물밑 접촉이 있었다.

그러나 설사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실질적인 진전이 일어나기는 어렵다. 미국의 약속 불이행 등으로 합의가 파기되고 긴장이 다시 높아진 게 지난 20년간 북미 대화의 패턴이었다.

▶ 관련기사 5면

먹구름을 몰고 온 미국의 ‘아시아 중시’

오늘날 동아시아는 심각한 경제 위기와 지정학적 갈등 속에 불안정이 심각해지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다오위다오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본과 중국의 긴장 관계는 1백 년 전 제1차 세계대전 발발 당시와 비교된다”고 우려했다.

중국을 포위하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 전략이 이런 갈등의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오바마가 군사동맹을 확대하고 대중국 포위망을 강화하자, 중국이 이에 격하게 반발했다.

2012년 한 해만 돌아봐도 한·미·일의 각종 군사훈련, 일본 자위대의 전력

증강, 중국의 맞대응 등으로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적 경쟁이 커져 갔다. 이런 분위기가 북한을 더욱 압박하고 자극한 것은 물론이다.

게다가 오바마는 북한 위협론을 중국 포위에 이용했다.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상호 포격을 빌미로 오바마는 핵항공모함을 서해로 들여 보낼 수 있었고,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처리해 나갈 수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불과 1년 동안 두 번의 로켓 발사와 핵실험까지 강행하게 된 것이다.

굳건한 반제국주의가 중요하다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패권을 위해 긴장 고조도 아랑곳하지 않는 제국주의 체제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북한 위협론을 내세운 미국의 패권 강화 시도에 단호하게 반대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진보적 단체와 개인이라면 모든 핵무기가 지구상에서 사라지기를 바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진보진영 일부가

북한 핵실험을 무비판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진보정의당이 북한 핵실험 비판에 강조점을 더 크게 뒀서 정부에 “빈틈없는 안보 태세”까지 요구하고 국회 대북 규탄 결의안을 찬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많은 진보 단체들이 미국에 1차적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양비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는 결코 양비론이나 북한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제국주의의 책임을 덜어 줘서는 안 된다. 압도적인 핵과 재래식 전력으로 전 세계에서 야만과 학살을 저지르는 건 바로 미국 제국주의이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도 제국주의 지배자로서 동아시아 불안정의 일부이긴 마찬가지다. 따라서 미국에 맞서 다른 열강에 기대지

말고, 노동자·민중의 반제국주의 운동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MD 참가, 대북 제재 동참 등 한국 지배자들의 친제국주의 정책도 좌절시켜야 한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차기 전투기 도입 등 군비 증강도 막아야 한다.

한편으로 한국의 우파 정부는 이번 핵실험을 기회로 자신들의 치부와 실정을

가리고 종북 마녀사냥 등 진보진영을 이간질시키는 데 악용하려 할 것이다. 쌍용차·한진중공업·현대차 등에서 노동자들의 처절한 목소리와 저항도 이를 이용해 덮어버리려 할 것이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적 관점을 분명히 하면서, 우파의 진보진영 탄압과 분열 시도에도 단결해 맞서야 할 것이다.